

ISSN: 2635-6104

북극연구

The Journal of Arctic

No.28 MAY 5
2022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 북극학회

북극연구

The Journal of Arctic

No. 28 MAY 2022

발행일 : 2022년 5월 31일

인쇄일 : 2022년 5월 31일

발행인 : 김정훈

편집위원 : 계용택, 김자영, 라미경, 박종관, 방민규, 배규성, 서승현, 양정훈, 예병환,
이재혁, 한종만

발행처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 북극학회

전화 042) 520-5713

FAX 070-4850-8428

E-mail : kiseling@daum.net

주소 : (35345)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도마동) 배재대학교 아펜젤러관 416호

인쇄처 : 오크나

주소 : (34862)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64-2

전화 : 010-5755-0086

디자인 : 이다용

표지사진 : 2020년 콜라반도 사미마을(김정훈 소장 현지출장 중 촬영)

이 결과물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1081461)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9S1A5C2A01081461)

목 차

▶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질서의 재편과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의 징조	----- 1
한종만	
▶ 신(新)정부 북극정책 발전방안: 안보를 중심으로	----- 6
신경수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극 안보협력의 전망	----- 11
라미경	
▶ 우크라이나 사태의 러시아 북극개발정책에의 영향	----- 19
박찬현	
▶ 러시아의 환경문제와 환경 CSO의 역할 - 북극권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	----- 27
차명제	
▶ 야쿠트민족의 전통적 세계관과 주거문화	----- 42
김자영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질서의 재편과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의 징조¹⁾

한종만
(배재대학교)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소수민족연구소 주최 “공동학술대회: 북극, 행위와 언어 공간”이라는 세미나를 축하하며 모든 참여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팬데믹(코로나), 기후변화(위기), 탈세계화(degloabalization), 디커플링(decoupling), 신냉전(new cold war), 스태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곡물, 에너지, 원자재 등), 지정학의 부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재고, 리쇼어링(reshoring), 프렌드 쇼어링(friend shoring),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진영(권위 vs 자유민주) 대결, 중립국의 NATO 가입, 북극 협력의 갈등/분쟁 고조 등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제2차세계대전 종료 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제3차세계대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유럽 전쟁 19세기 초부터 중립국 스웨덴, 1948년부터 중립국 핀란드는 공식적으로 NATO 가입을 신청했으며, 영세중립국 스위스도 NATO와의 협력에 전향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가입이 승인될 경우 NATO 회원국은 32개국이며, EU 27국 중 비나토국가인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몰타, 키프로스도 동참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극 국가 7개국은 NATO 회원국이 되면서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의 심화와 활동 반경의 제약이 명약관화합니다.

흑해와 아조프해 열전(hot war)이 발트해와 북극해로 확산될 징후도 보이지만 스웨덴 발트해 고틀프리트 섬 기지로 추가적으로 러시아 발트해함대의 활동 제약, 흑해함대도 보스포러스 해협과 지브롤터 해협으로 제한, 북극해에서도 러시아 북부함대도 스발바르 Bear(노르웨이 노스케이프-베어 섬-스발바르), GIN(그린란드-아이슬란드-노르웨이), GIN(그린란드-아이슬란드-노르웨이), GIUK(그린란드-아이슬란드-영국) gap을 통과해야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러시아가 국가사업으로 전개한 북극 개발사업(북동항로, 자원개발 등)도 서방의 제재로 지연되거나 정체될 것이며 독자개발도 한계에 직면할 것입니다.

1) 이 글은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소수민족연구소 주최로 2022년 5월 27일 서울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된 “공동학술대회: 북극, 행위와 언어 공간”에서 발표된 기초연설문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자는 우크라이나이며, 러시아도 피해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 세계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강도 높은 러시아/벨라루스 경제제재와 역제재(counter sanction)로 세계는 스태그플레이션(stagnation + inflation) 혹은 퍼펙트 스톱(사상 최대의 복합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 위기 역사에서 점철되어왔던 '내핍'의 적응력과 '경제 요새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역부족으로 판단됩니다.

우크라이나 개전 전후 루블화 가치는 40% 이상 하락했지만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엘비라 나비올리나(경제개발부장관 역임)의 현명한 전시 정책의 일환으로, 기준금리 2배 이상(9.5%에서 20%) 인상, 기업의 달러와 유로 보유분의 80% 루블로 강제 교환, 개인들은 은행, 환전소에서 경화(hard currency) 구입 금지, 외국인의 모스크바 증시 처분 금지 등의 조치로 루블화는 개전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전쟁 준비(서방의 제재 대비)를 위해 외환보유고의 달러 비율을 줄이는 동시에 유로, 금, 위안화 비율을 늘렸다. 역설적으로 에너지 시세의 상승으로 러시아의 1분기 경상수지는 58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서방의 촘촘한 금융제재로 러시아의 디폴트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에 활동하던 맥도날드 등 1,000여 개 외국기업의 철수 혹은 축소하면서 러시아 주민들은 1990년대 경험했던 상품/서비스 부족과 인플레이션이 동반되는 shortageflation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국가/국민 정체성, 특히 '강한 국가'와 think big에 대한 열렬한 향수의 반추 개념은 톨스토이 단편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의 교훈을 상기시킵니다. 전쟁 발발의 동인은 복합적이며 다층적 요인 등에 기인하지만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의 위배이며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만 3개월이 지났으며 러시아의 침공은 진퇴양난 상황이며 교착상태입니다. 물론 러시아는 돈바스와 크림반도의 남부 회랑 확보 혹은 몰다바 트란스니스트리아 친러 미승인국과의 연결 거점의 확보로 종결을 원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절대 항전의 의지를 밝히면서 전쟁은 한국동란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푸틴의 작품인 이 전쟁의 종결을 위한 출구전략이 필요합니다. 전쟁 종결 이후에도 양국의 상흔 해결과 재건에는 오랜 시간(한 세대 이상)과 천문학적 비용이 요구됩니다.

곡물과 비료의 세계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은 농수산품의 가격 상승(agflation, fishflation)으로 이어졌고, 특히 인도, 미국 등의 이상기온으로 작황의 악화, 주요 농업국의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위해 수출제한 혹은 금지 등으로 가격 폭등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제제재로 유럽은 에너지 공급원의 전환(노르드 스트림 2 개통금지 등)과 다변화 과정에서 원료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탈탄소화 전환 과정, 특히 재생에너지원의 간헐성 등으로 석탄, 석유, 가스 등의 가격 상승(greenflation)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후위기의 원인 제공자로 ESG 관점에서 평판이 나빠던 전통적 에너지기업들도 다시금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 시가 총액기준으로 세계 1위 기업 '애플'을 제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약 2조 4,300억 달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와 유동성의 증가,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도시 봉쇄), 세계 공급망의 재편 등 공급 측면과 경제주체의 기대심리(사재기, 매점/매석 등)의 수요 측면 외 자원/에너지/식량안보 등 복합적 요인으로 야기된 인플레이션(소비자 및 생산자물가)은 세계의 주요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실업과는 달리 누구도 예외가 아닌 모든 경제주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플레이션의 피해자는 국내에서는 저소득층과 빈곤층이 직격탄을 당하는 것처럼 국제적으로 가난한 국가와 식량/자원/에너지 안보에 취약하거나 해외의존도가 높거나 외환보유고가 충분치 않은 국가들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원화 가치의 하락(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imported inflation)에 전적으로 반영되어 무역/경상수지의 적자, 다시금 환율 상승이라는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1970년대 2번의 석유파동 때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stagnation + inflation) 현상처럼 현재 이와 유사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억제에 기준금리를 올리면 완화될 수 있지만 경제정체(실업문제)라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련 해체 이후 탈냉전과 팩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시기 미국의 오만과 자신감 팽배 그리고 세계 경찰의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나 2001년 9.11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국력은 점차적으로 약해졌습니다. 냉전 시대부터 제2세계와 제1세계 진보 인사들이 주장하는 미국의 '달러, 무기, 자원/식량'의 3대 병기의 역할이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다시금 약해졌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이 주도한 세계화는 역설적으로 BRICS 국가의 고도성장, 특히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담당하면서 G2로 부상했으며, 기술 및 우주 굴기 등으로 미국과 대등할 정도로 발전했으며, 일부 분야(양자컴퓨터, 배터리, 5G 등)에서는 미국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중국이 시장경제의 개방 및 활성화하면서 '자본주의 위기'를 살렸으며, 값싼 중국산 제품이 세계 인플레이션을 진정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권위주의와 '위로부터의 개혁'을 기반으로 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체제의 약진은 세계의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중국 의존도를 양/질적으로 높였으며,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중국 모델의 선례를 답습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렉시트(Brexit)'와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등으로 세계화의 창시자인 영미권의 탈세계화(민족주의, 보호주의, 고립주의 등)는 가시화됐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중국몽의 실현을 위해 과거 도광양희(韜光養晦)에서 대국굴기(大國崛起)를 노골적으로 표출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무역/서비스교역뿐만 아니라 국방, 우주, 제4차산업, 문화, 가치 등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는 서방과 러/중 간 냉전 혹은 냉전 2.0 시대로 돌입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를 내건 서방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 대결은 국방, 정치, 경제, 기술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세계 일부 스트롱맨(strongman) 지도자가 통치하는 권위주의 국가들의 공통점은 장기 집권, 언론 통제 등을 통해 개인보다 전체 국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푸틴 정치의 설계자 블라디슬라프 수르코프의 러시아 '주권적 민주주의' 혹은 지정학자 알렉산드르 두긴의 대유라시아 제국 건설 개념은 러시아 시민의 자유 억제와 민주주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국가 주도의 정책은 단기간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초심의 변화, 부

때, 빠른 정세 변화 적응, 신기술 등 인적자원의 창의성과 혁신의 장애요인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지도자 임기는 10년이 이상적으로 생각됩니다. 푸틴의 지도력으로 2000년대 러시아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의 계기를 조성했습니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지도자들이 10년 임기 불문율이 지켜지면서 높은 경제성장의 달성도 그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진핑의 이 불문율 위반이 중국의 발전과의 상관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소련과 러시아경제를 공부한 강연자는 러시아의 지정/지경학적 잠재력과 러시아어 습득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러시아어는 구소련 및 독립국가연합(CIS)에서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타 유럽지역에서의 경우에 있어서도 슬라브 어족인 불가리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어어, 체코어 등과 일부 유사합니다. 중국어, 일본어보다 러시아어는 희소성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옛 동독(러시아어 제1외국어)과는 달리 주체사상으로 인해 북한에서 러시아어의 중요성은 퇴색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소련 '고려인'의 대부분이 한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러시아어 습득은 큰 장점이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한국 내 러시아 관련학과(노어노문학, 러시아학, 러시아어)의 인기도는 러시아의 국력(hard & soft power)과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 사회 무질서와 혼란, 인터걸 등으로 러시아의 국력의 실체가 밝혀졌으며, 1997년 러시아 금융위기(모라토리엄), 2014년 크림반도 합병으로 서방의 경제제재로 러시아학과의 인기도는 위기 때마다 하락했습니다. 한국인의 러시아 석박사 유학생도 1990년 초/중반 호황을 이루었지만 모라토리엄 이후 유학생의 수는 급감했으며, 한국 내 러시아 관련학과도 통폐합 순을 밟고 있으며,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더 나빠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공생의 취업도 더욱 어려워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러시아 및 북극 연구의 후원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후학들에게 안스럽고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러시아 및 북극 연구의 붐 혹은 활성화는 포스트 푸틴 시대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 등 우리에게 생존전략을 가능케 하는 북방공간의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극을 얼마만큼 아는가? 북극이 바다라는 사실은 1958년 미국 노틸러스 잠수함에 입증됐으며, 2019년 러시아 북부함대는 프란츠요셉랜드 해역에서 5개 섬 발견,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대책 등 아직도 북극 연구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인과관계의 다층적이고 종합 분석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가치 동맹으로 서방의 민주진영 G7, EU, NATO(최근 사이버 나토 출범에서 한국 초청)의 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쿼드(Quad: 4자안보 대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AUKUS(호주, 영국, 미국),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IPEP(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이 출현되고 있습니다. 권위 진영은 CSTO(집단안보조약기구),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BRICS,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힘겨운 줄타기 외교를 해왔습니다. 한미 군사동맹을 주축으로 한국은 안미경중(安美經中)의 ‘깁’ 외교 속에서 우리의 전략적 모호성이 유지되었습니다. 한국은 10대 경제강국으로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지만 지난 정부보다 새 정부는 가치 외교로의 전환이 예상됩니다. 한국은 북한 핵 자산의 고도화로 야기되는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공급망, 에너지, 식량, 기술 등) 안보도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양 진영 간 대결 과정과 각 진영 간 협력 과정에서 경쟁, 갈등, 분규, 전쟁에 관련된(될)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진영 대결에서 북중러와 한미일 동맹의 강화 예상 시나리오는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 진영의 쿼드에서 인도, ICEP 대만 배제, 한일 갈등 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권위 진영에서도 러시아와 중국의 패권과 경쟁이 존재합니다. 중립국의 설 자리는 상대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강(自強)과 국익과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일관적인 단단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시대정신(Zeitgeist) 가치로 여겨지는 ‘사회적 상식’(인류애, 자유, 공정, 정의, 연대 등)이 통하는 사회를 기원합니다. 민주 진영은 권위 진영을 악마 혹은 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진영의 공통분모인 ‘공동체’와 ‘연대’ 가치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마의 산’ 장편소설 작가 토마스만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지성인의 덕목을 더불어 함께 잘사는 ‘사회주의적 가치’라고 기술했습니다. 이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청해줘서 감사합니다.

신(新)정부 북극정책 발전방안: 안보를 중심으로

신경수
(충남대학교)

1. 북극에서의 러시아 전략의 엄중성

북극지역 안보구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북유럽 4개국 중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 오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미국 중심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편입을 희망하면서, 북극-발트해 지역의 군사적·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러시아의 북극전략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면서 러시아 주변국들의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동맹정책이 발트해 연안국에 대한 러시아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나토 헌장 5조는 회원국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 유엔헌장 제 51조에서 인정한 독자적, 집단적 방위권을 행사하여 나토 각 회원국들은 집단적 또는 독자적으로 공격받는 국가를 상호 원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방어 원칙은 나토와 러시아 간 북극전략의 긴장감 또한 증가되고 있다.

북극은 그동안 러시아에 있어 군사적·경제적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되어 온 지역이다. 북극해의 광범위한 항로 이용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함께 군사전략적 이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천연가스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경제영토로서의 가치도 충분한 북극에 미국은 이미 1953년부터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툴레공군기지를 설치하여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북극권 일대 NATO의 주요 방어기지를 건설하였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얼음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동아시아와 북대서양 양안 지역을 잇는 북극해로의 연결이 가능해졌고, 해빙지역과 기간이 늘어날수록 북극에 대한 경쟁력은 커지고 있다. 2015년 러시아는 북극지역 방어권 강화를 목적으로 핀란드 접경지역인 콜라반도에 북부합동전략 사령부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북극에서의 주도권을 사실상 러시아가 모두 갖겠다는 국제사회에 대한 일종의 호언적 행동이었으며, 북극에 인접한 프란츠 요제프 랜드 군도의 일부인 알렉산드라 랜드(Alexandra Land)에 군사기지를 건설하여 북극지역 내 최대 규모의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핵 추진 쇄빙선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는 북극해 항로(NSR·Northern Sea Route)의 수송 잠재력을 향상시키며, 물자와 인력을 자유롭게 이동시켜 군사기지화를 가속하고 있다.

<그림 1> 러시아의 북극기지 건설



출처: BBC, “Russia builds Arctic air defence base”, 2015.9.29.

러시아는 북극에 매장되어 있는 셰일가스를 직접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였고, 자국의 영향력 강화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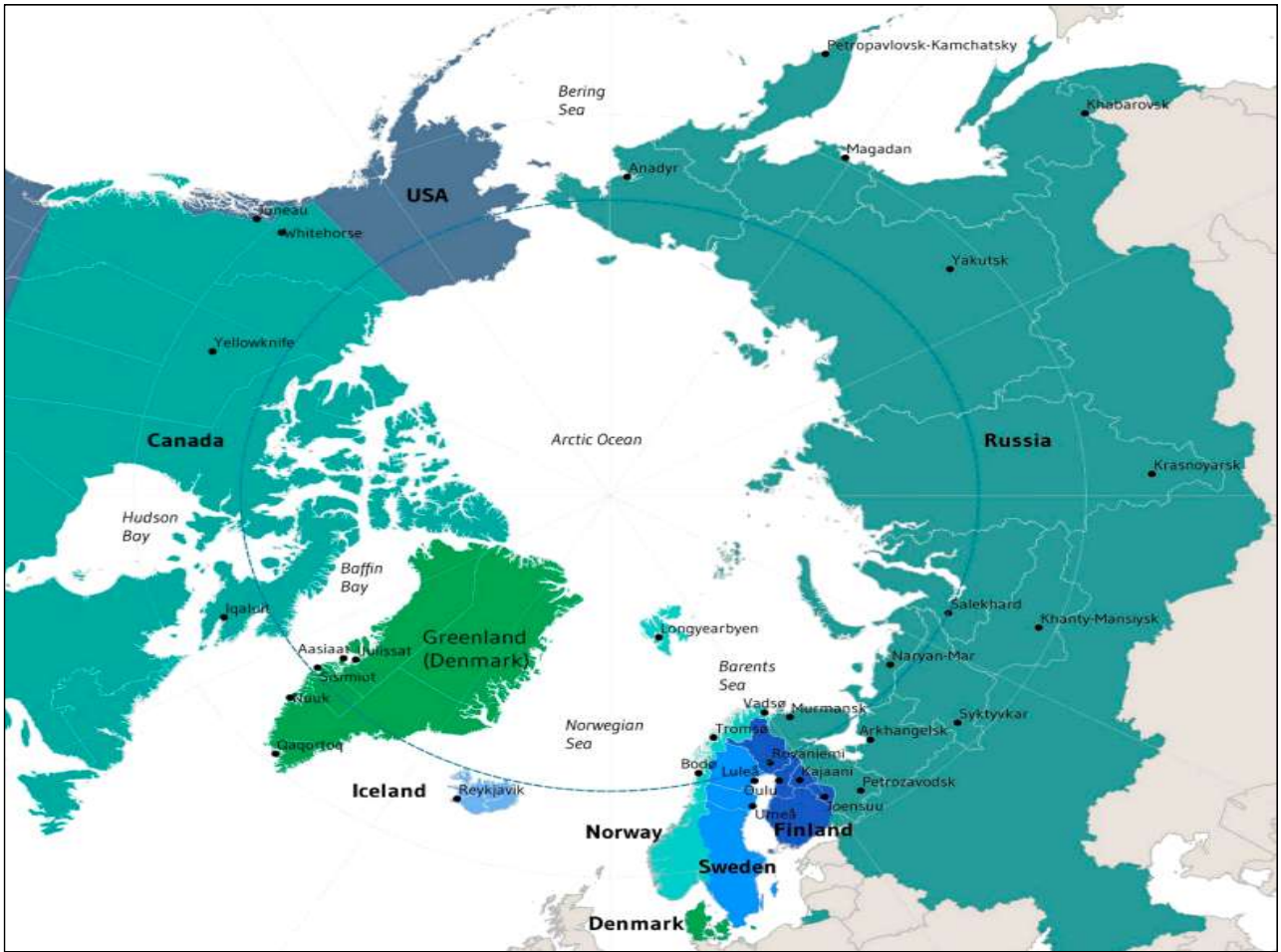
미국도 알래스카를 통해 북극권에 접하며 군비증강을 하는 등 북극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천연자원과 항로, 군사적 이점 등에서 지정학적 중요성이 큰 북극에서의 우월적 선점권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러시아의 군사·안보적 패권경쟁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2. 북극의 중요성 인식과 전략적 사고의 필요성

북극에서 영유권을 행사하는 북극이사회(ACF) 소속 8개국(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미국, 스웨덴, 아이슬란드, 캐나다, 핀란드)은 모두 과거 미지와 흑한의 세계에 대한 탐험공간이었던 북극을 과학연구와 경제활동의 자원수장고로 보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북극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쉬어지고, 이곳의 평가가치가 상승하면서 이를 힘으로 지키려는 군사력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그림1> 북극의 행정구역



출처: Finland's Strategy for Arctic Policy(2021)

사실 북극은 한국과 지정학적 거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연구 등 그 중요성 인식의 강도가 약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한국이 북극이사회 영구 옵서버로 가입하면서, 북극에 대한 재평가와 연구·개발 필요성이 강조되었고,¹⁾ 안보차원의 접근보다는 주로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그로인해 예상되는 해로운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북극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러시아의 북극권 개발 계획이 미국과의 경제·군사적 패권 경쟁이라 불릴 만큼 격화되고 있고,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도 북극이사회 옵서버로 참여하면서, 북극에서의 국가안보 차원의 영향력 강화에 많은 투자를 실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계와 우리만의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1) 북극이사회는 회원국(8)과 38개국·비정부기구 등 옵서버(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중국, 폴란드, 인도, 싱가포르, 스페인, 스위스, 영국 외 정부 및 의회 간 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극지 이야기, 검색일(2022.5.10.)

중국은 2018년 ‘북극정책 백서’를 공표하여, 중국을 북극문제의 중요한 ‘이해 당사국’(stakeholder)라고 규정하고 지리적으로 북극권(Arctic Circle)과 인접한 ‘近북극국’(near-Arctic state)으로 지칭하여 그 동안 북극항로 개발 등을 수행한 중국의 관심을 국제사회에 천명하였다.²⁾ 또한 일본은 해상자위대 실습함정을 북극권에 보내 훈련을 전개하는 등 자위대가 북극권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예비 조사를 하고 있다.³⁾

실제로 미국은 2018년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훈련을 위해 27년 만에 항공모함을 북극권에 파견했으며, 중국해군은 2015년부터 함정훈련을 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2년 이후 해군을 동원해 원거리 항해를 반복하고 있는데, 최근 북극 해역에서 약 1,200명의 해군과 30척의 군함·잠수함·지원함, 140여 대의 각종 군사장비, 20대의 전투기와 헬기 등이 북극해 일대에서 훈련을 하였다⁴⁾. 이처럼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북극권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북극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위해 북극 일대에서 군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물론 한국도 1999년 최초의 북극탐사를 시작한 이래, 2002년 다산 북극과학기지와 2004년 극지연구소 설립, 2009년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투입 등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북극 연구에 동참하고 있고, 2021년 극지활동 진흥법이 제정되어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등 북극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군사적 안보확립을 위한 전략가치에서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다.

지난 역대 정부에서의 북극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북극 항로 해상교통로 보호와 북극을 둘러싼 열강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북극의 전략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안보차원의 북극전략을 수립하고, 혹한의 추위를 견딜 수 있는 함정 건조와 훈련이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0월, 해군은 최초로 한국형 5,500톤급(만재) 구축함과 23,000톤급(만재) 군수 지원함으로 구성된 순항훈련전단을 북극권 베링 해로 보내 해상훈련을 시행하였다.⁵⁾ 전투력 강화 등 일련의 전개훈련보다는 해군사관생도들의 교육과정 중 하나인 순항훈련이지만 북극해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필요한 전력과 교리를 발전시키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러한 첫걸음은 한국의 북극 해양안보 확립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실행 가능한 북극정책 제언

첫째, ‘북극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공식기구로 신설하여 북극지역 정보를 통합 분석·활용하고, 북극통합정보시스템 관리·운영 지원을 통해 전문지식과 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활성화할 것을 제언한다. 이 글에서 북극정책은 안보적 관점에서 기술하여 해군을 포함한 국

2) 이서향, “중국의 북극접근: 북극정책백서의 주요 내용과 의미”, KIMS Periscope 제119호

3) 이세원, “일본 자위대 '수상한' 북극권 항해...군사적 활용 준비하나”, 연합뉴스, 2020.11.21.

4) 유철종, “'우크라이나 위기' 속 러시아군 북극해권에서도 해상훈련”, 연합뉴스, 2022.1.27.

5) 박규백, “한국해군의 북극권 베링 해 항해와 신북방항로 개척의 의미”, KIDA ROK Angle 제248호 (2022.3.29.)

방 분야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북극해의 활용을 위해서는 지형, 기후, 기항지, 수심 보급시설 등의 정보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이다. 북극 연구에 필요한 시설·장비 개선과 전담인력에 대한 국고지원을 향상하여 극지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활성화 등 다양한 차원의 지원이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직접적인 북극해 접근을 위한 남북한 해양항로 협상을 제언한다. 북한지역 항로를 이용하여 직접 러시아 극동으로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북한과의 전략적 합의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한반도 안보의 냉철한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 공동 안보방어권 확대를 위한 협의가 실현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제관계의 혼탁한 상황에서 확신할 수 없으나, 내적 통일과 함께 외부로부터의 안보확립을 위해서 해양권 확보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므로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평화적 공동수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극 지역의 평화수역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한국에 설립하고, 국제평화수역으로 어떠한 군사적 우위를 한 국가가 영위할 수 없도록 평화지대화를 추진할 것을 제언한다. 세계적 합의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북극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정책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강대국 사이에서 끼어있는 한국의 열악한 지정학적 여건을 감안했을 때, 장기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안정되고, 지속가능하고 실행가능하며 성과적인 북극정책을 추진할 때가 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극 안보협력의 전망

라미경
(서원대학교)

1. 들어가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러 방면에서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쟁은 안보 불안 뿐 아니라, 세계 식량안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해 개발도상국의 기아 인구가 수천만 명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주요 곡물 생산, 수출국으로 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식량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흑해를 봉쇄하면서 현재는 수출길이 막힌 상태이다(이데일리 2022. 5. 23).

이런 현상은 새로운 냉전 시스템의 전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의 이미지로 계승되었지만, 이제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범국가로 위상이 전환되어 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이미 러시아는 ‘바이든 표 새로운 악의 축’으로 규정되고 있다(조한범, 2022, 6).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향후 북극권 안보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현재 우크라이나 위기로 동유럽지역에서는 스웨덴,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¹⁾이 명시화되는 등 대격변이 발생하고 있지만 멀리 떨어진 동아시아 지역은 아직 방관자, 관찰자로 머물러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북극에서의 안보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북극은 급속하게 녹는 얼음으로 인해 더 접근하기 쉬워지고 있어 해양 항로와 자원개발이 강화되고 있다. 그 결과 북극권 국가들은 그들의 국가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에 군대를 배치하는 등의 적극적 행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새로운 전략적 이익과 그에 따른 북극의 군사화로 인해 미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냉전종결 이후 약 15년간 환경보호 등을 중심으로 협력적 모습을 보였던 북극이 ‘냉전 2.0’을

1) 나토(NATO) 가입신청서를 낸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가입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나토 회원국인 터키가 ‘반대한다’는 기존 견해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토 규정상 신규 회원국 가입은 기존 30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해야 하는데 터키가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그간 74년간 지켜온 중립국을 공식적으로 포기한 것이다.

예고하며 강대국 간 새로운 경쟁과 대결의 무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극권 국가뿐 아니라 비북극권 국가들의 새로운 북극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추동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북극의 안보협력에 관해 전망해 보고자 한다.

2. 포괄적 안보 개념

일반적으로 북극의 안보를 설명할 때, 지리적 공간에서 전개되는 행위자들의 정치관계에 관심을 가지는 전통적 지정학의 관점에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으로 보거나, 북극을 단순한 '얼음바다(ice sea)'로 자연적 방벽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북극의 얼음이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면서 북극은 중요한 지정학적 변수로 부상되었다. 2007년부터 북극은 '평화와 협력'의 영역인 동시에 '군사적 안보'의 영역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포괄적 안보개념은 전통적 안보개념이 군사중심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비해 군사뿐 아니라 비군사 요소들까지를 포괄하여 설정되는 개념이다. 이런 점에서 포괄적 안보 개념은 전통적 안보 개념보다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전통적 안보위협은 전쟁이나 국지도발과 같이 국외의 조직화된 무력에 의한 영토침략이나 주권침해를 지칭하였다. 즉, 전통적 안보 영역은 주로 물리력의 사용이 개입된 군사분야이다. 하지만 포괄적 안보 개념에 의하면 국가안보는 군사뿐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 과학기술 등 더 많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고, 또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현대 사회에서 경제발전, 사회안녕, 환경보존, 과학기술 진보 등도 군사적 안위 못지않은 중요한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다(김영호, 2009, 160). 현대 국가의 안보 영역은 군사 위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자원, 기술과 대형 재난 등 비군사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상현, 이대성, 2007, 100-101).

첫째, 탈냉전기에 국가안보 개념은 군사전략적 측면의 안보개념에 경제·사회·자원 등 비군사적 요소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화되었다. 둘째, 국가안보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의 안보 부담이 가중되지만 국가의 안보능력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교통과 통신의 급속한 발달, 국경을 초월한 다국적기업 활동, 국제기구의 역할 증대 등으로 국경의 의미가 점차 상실되고 있다. 즉 개인, 다국적기업, 국제기구 등 국경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행위자들의 수적 증가와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하고 있으며 안보 능력의 감소라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셋째,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되면서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곧 국가안보의 관심 대상이 상대국의 외교뿐 아니라 국내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까지 확대됨을 의미하며, 자국의 경우에서도 대외문제와 국내 상황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파악해야 하기에 과거보다 안보문제를 다루기가 훨씬 어려워지고 있다. 넷째, 냉전기에는 적대국과 우호국의 구별이 명확하

였으나, 탈냉전기에는 냉전적 이념 대립이 소멸됨에 따라 적과 우군의 구분이 모호해져 안보위협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념적으로 적대관계를 유지하든지 또는 군사적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대립 또는 경쟁하여야 하는 다면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리해보면 포괄적 국가안보 개념을 군사, 비군사에 걸친 대내외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가목표와 국가가 추구하는 제 가치 보전, 그리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반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3. 북극 및 북유럽 안보협력을 위한 노력

1987년 고르바초프(M. Gorbachev)가 북극의 비핵지대화, 자원이용의 평화적 협력, 과학조사와 환경보호의 공동 노력, 북극항로 개발 등 북극 환경보호를 위한 북극협력을 위한 무르만스크 선언(Murmansk Declaration)을 발표했다. 러시아 북극권 개방이 시작된 이후로 북극의 환경보호는 북극권 국가들의 최대 이슈였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위험성이 고조되어 있다.

이렇듯 북극의 대표적 포괄안보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기후변화이다. 2019년 해양빙권 특별보고서에서는 기후온난화로 인해 바다와 빙하지역에서 일어나는 환경변화는 멈출 수가 없으며 이런 추세로 지속되면 해양과 극지방, 산악에 거주하는 10억 명의 생명에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극권의 영구동토층은 약 1,460~1600기가 톤(Gt)의 유기탄소를 포함하고 있는데(김민수 2020, 43-44)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메탄가스 방출과 탄저균 노출로 순록 20여만 마리와 어린이 1명이 사망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북극해의 빙하를 녹이고 전 세계 막대한 피해(홍수, 가뭄, 한파, 질병, 영구동토층 메탄가스 방출, 세균, 미세플라스틱 오염)를 안겨주고 있지만, 북극권의 국제협력과 글로벌거버넌스 구축은 북극이사회를 중심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질서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북유럽 지역에서 공동의 문제해결을 목표로 도입한 새로운 협력구조로 2009년에 도입한 노르딕방위협력은 기존의 접근과는 다른 협력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 노르딕(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국가 5개국은 북극이사회²⁾ 회원국이다. 북유럽 국가들이 유럽통합 과정에 참여하면서 북유럽의 독자적인 안보협력 이니셔티브에

2) 북극이사회는 1996년에 창립한 북극에 관한 여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간 협의기구다.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미국의 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이사회 의장은 국가들이 순번으로 2년씩 하는데, 의장국이 실질적인 결정권은 없지만, 의사결정기구라 할 수 있는 각료회의와 고위실무회의(Senior Arctic Officials: SAO)를 주최하고 회원국들 상호 간 의사를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대한 관심이 약화 되었으나, 사실상 1990년대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의 시기는 북유럽 방위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한 시기였다(오창룡 2020, 85). 노르딕방위협력기구는 순환의장국 제도로 운영되며 간소한 조직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정책수준, 군사수준, 실무협력 부분으로 구성된 협력구조이다. 다양한 협력정책과 사업은 회원국의 국방예산을 통해 추진한다.

북유럽은 우크라이나 사태 및 러시아와 서구 국가간의 관계 악화로 북유럽 차원의 안보협력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되었다. 즉, 지역안보공동체(regional security complexes)는 적은 수의 국가들이 지역 차원에서 안보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Buzan 2003, 141). 부잔에 의하면 모든 국가가 상호의존적인 네트워크에 속해 있으며 대부분 군사적 위협은 장거리보다는 단거리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북극권의 안보협력을 위한 안보레짐은 노르딕방위협력기구처럼 지역적 수준으로 이루어지며, 이들 국가는 스발바르조약국이기도 하다. 촘촘하게 짜인 네트워크는 북극권을 둘러싼 국가간 다양한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해주고 새롭게 부각되는 비전통적 안보 문제에 대해서 협력을 모색하게 할 것이다.

자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경쟁전략이 협동전략을 압도하는 무정부 국제체제에서는 항상 위험이 상존하기에 안보레짐이 나타나는 것이다. 반면에 현실주의 관점에서는 국가들이 협력하기를 원하지만, 무정부상태가 조정을 어렵게 하므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안보레짐이 형성된다고 본다. 하지만 문제는 형성된 안보레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레짐을 단속하는 데에서가 아니라, 회원국들이 인식하고 있는 레짐의 궁극적인 목표 사이에서 괴리가 생겨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라미경 2020).

안보레짐의 핵심 행위자들 가운데 누구도 레짐이 사라지기를 원치 않으며 북극권을 둘러싼 안보게임은 언젠가는 해결될 것이고 적어도 개별국가의 도발로 인한 갈등은 원치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나타나곤 한다.

4. 북극 안보협력과 이슈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북극권 거버넌스 체제인 북극이사회의 협력을 종료하게 했다. 2022년 3월 3일, 북극이사회 8개 회원국 중, 의장직을 맡은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7개 회원국(NATO 회원국인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미국, 가입신청국 핀란드, 스웨덴)이 북극이사회의 협력과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일시 중지(pause their work)”하겠다는 발표를 했다(Elizabeth Buchanan 2022, 4). 이에 러시아는 북극지역의 협력 대신 국내 북극 이익에 재 초점을 맞추려는 일방적인 계획을 강조했다.

북극해의 지리적 공간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군사·안보적 차원까지 확장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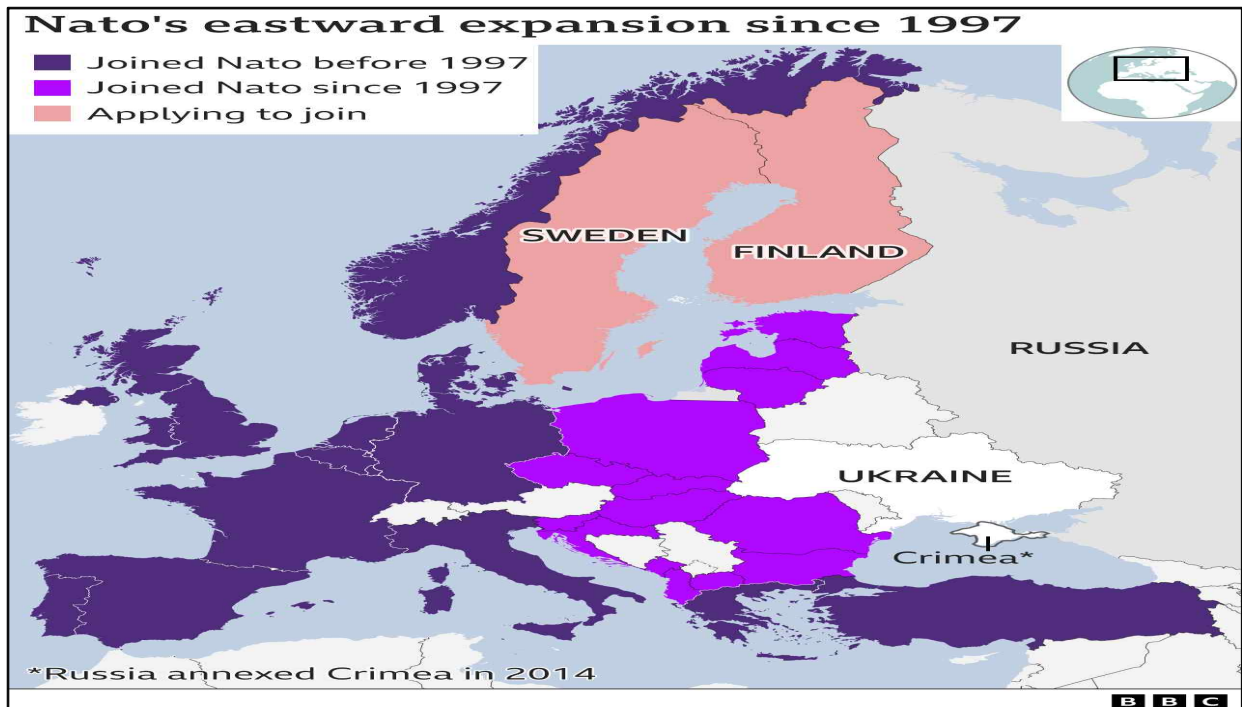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북극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지역으로 경제적 기회와 증가하는 국제적 관심과 함께 심각한 환경적, 사회적 혼란에 직면해 있다. 더이상 북극은 북극 원주민과 거주민만의 공간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공간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북극이사회는 지난 25년간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북극의 지속가능개발과 환경보호 문제를 논의하는 대표적인 조직으로 역할을 해왔다. 또한 북극의 환경, 경제, 사회적 평가를 수행하여 북극의 주요 문제를 세계적 차원에서 공론화 했다(제성훈 2021, 50-51). 북극이사회 의장국은 2년마다 북극 국가인 캐나다, 미국, 핀란드, 아이슬란드,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이 순환하여 담당하는데 현재 의장국은 러시아(2021년-2023년)이다. 북극이사회 의장은 의장국의 외무장관(또는 북극 문제 관련 장관)이 담당한다. 의장국 임기 종료 시 회원국의 장관급 대표들로 구성되는 북극이사회 각료회의가 진행된다.

오랫동안 북극이사회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해 합병하여 모스크바와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도 다자간 파트너십을 유지해왔다. 북극이사회는 과학연구, 수색 및 구조작업, 기후변화로 인한 도전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과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 왔다. 북극이사회는 이누이트 환북극 이사회, 노르웨이 사미족, 러시아 북극 원주민 협회 등 북극권 소수민족 기구를 합쳐 총 6개의 북극 원주민 단체 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와도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후, 북극이사회 회원국은 의장국인 러시아를 배제하고 이사회 운영을 “일시 중지”하고 있다. 특히 북극이사회 회원국인 핀란드와 스웨덴은 오랫동안 중립을 유지해 왔지만, <그림 1>에 나타나듯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나토가입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높아졌고 실제 나토 가입국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그림 1: 1997년 이후 NATO 가입국>



자료: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검색일: 2022.5.14.)

이와 같은 북극이사회의 동결은 북극 안보협력에 적신호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는 세계 안보와 직결된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2014년 크림반도 사태와 견주어 보았을 때, 북극 안보 및 북유럽 안보에 치명적이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조치들은 다른 북극 국가들과 모스크바와의 통신선을 잃게 하였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 되는 기후변화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다. 실제로 북극에서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중요하다. 세계안보 관점에서 유럽의 전쟁을 북극으로 확대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 러시아와의 협력이다.

북극에서의 협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는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북극에서 러시아의 군사화나 동유럽의 무자비한 침략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북극이사회가 다루어 온 영역을 확대하여, '새로운 군사포럼'에 러시아를 참여시켜 북극안보에 협력하게 하고 다른 곳의 긴장 완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5. 나오기

장기전으로 진행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많은 인명 피해와 군사안보, 식량안보 등 국제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느슨한 형태의 거버넌스 체제인 북극이사회는 당분간 의장국인 러시아를 제외하고 나토를 중심으로 힘의 재편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첫째, 나토와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핀란드와 스웨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사적 비동맹주의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등 나토 동맹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인다.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의 국제분쟁 전문가인 멜라니 가슨 박사는 프랑스24 방송과 인터뷰에서 "나토는 북극해 지역을 전략적으로 재평가할 것이다. 이 지역에서 나토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을 볼 때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러시아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 발트해에 핵무기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한 러시아가 북극해 해안선을 방어하기 위해 북방함대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북방함대는 핵추진 잠수함과 항공모함을 갖춘 러시아 해군의 핵심 전력이라고 평가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해 해안선이 드러나고 있다. 전체 북극해 해안선의 53%를 차지하는 러시아는 북극해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기후변화로 전략적 가치가 증가한 북극에서 러시아와 치열한 군사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항해 경로가 열리고, 해저에 많은 양의 각종 자원이 매립된 북극은 근래 들어 새로운 국제사회 경쟁지역으로 떠올랐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은 북극권을 향해서 해군 함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알래스카주 서부 해안에 있는 항구도시 놈(Nome)을 심해 허브로 탈바꿈하기 위한 작업에 수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해안 경비대는 이곳에 쇄빙선 3척도 배치할 예정이다. 미 공군은 이곳에 최신형 F-35 스텔스 전투기 수십 대를 옮겼으며, 페어

뱅크스 지역 아일슨 공군기지 등에는 이미 2만 명 이상의 현역 군인도 배치됐다. 결국 미국은 미국 주도의 나토와 공급망 결집을 통해 북유럽, 북극, 아태지역에 이르기까지 군사적인 연계를 도모할 것이다.

셋째, ‘近북극국가(near-Arctic state)’로서 북극 문제에서의 중요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시작 중국은 전쟁 발발 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국가이익에 기초한 행보이고 중국이 전쟁에 개입하면 그동안의 비개입주의, 비동맹주의 외교 노선에 모순이 발생한다. 서방과 러시아가 싸우면 중국이 어부지리를 얻는다는 시각도 있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안정된 환경이 필요한 중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상태의 장기화를 반길 수만은 없을 것이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질서가 어떻게 재편되던 북극의 안보는 급속한 기후변화로 인해 갈등 속 협력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장기적인 북극 안보협력 전망으로는 다음과 같다. 북극지역은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경파괴에 따른 영향이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북극권의 생태계 위협, 원주민 삶의 터전 훼손, 생물종 다양성 보호문제, 해양동식물 먹이사슬체계 위협이 심각한 수준이다. 반면 북극의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해 해빙은 북극항로의 상용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이나 석유, 가스, 석탄, 광물자원, 관광개발을 가능케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필요하고 기후변화는 더는 북극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결과 북, 중, 러 삼각구도를 강화해 한국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외교정책은 선택의 공간을 열어 놓아야 한다. 또한 책임 있는 북극 이해 당사국으로서 북극 원주민 전통보호와 북극권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의 다각적인 노력과 북극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북극권 개발은 앞으로 분명히 확대될 것이고 그 규모와 범위는 국제경제 여건에 따라 개발시기와 타당성이 결정될 것이다. 동시에 북극권에서의 대부분 개발행위는 세계 환경단체와 원주민들의 주목을 받고 자칫 국제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민수, “극지의 창,” 『극지해소식』, 2020.9.30.

라미경,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북극권의 국제협력,”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24권 1호, 2020.

오창룡, “북유럽 안보협력 역사와 노르딕방위협력기구(NORDEFECO)의 창설,” 2020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극지연구센터 학술대회 자료집, 2020

이상현, 이대성,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위한 제언: 포괄적 안보개념을 중심으로,” 『통일 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제성훈, “북극이사회 창설 25주년의 의미와 향후 과제,”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25권 3호, 대전: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21.

Buchanan Elizabeth, “Cool change ahead? NATO’s Strategic Concept and the High North” *NDC Policy Brief*, 2022.

Buzan, B., “Regional Security Complex Theory in the Post-Cold War World,” *Theory of New Regionalism*, Edited by F. Soderbaum and T. Shaw,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3.

Giddens, A., *The Politics of Climate Change*, Cambridge: Polity Press, 2011.

우크라이나 사태의 러시아 북극개발정책에의 영향

박찬현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I. 머리말

2022년 2월 24일, 돈바스(Донбасс) 지역을 중심으로 고조된 갈등은 결국 러시아의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어졌고, 양측의 군사적인 충돌은 5월 중순인 지금까지도 많은 피해와 함께 지속되어 오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해 미국과 EU 등 서방국가들은 공언해온 대로 곧바로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단행하였다. 현재 세계 각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는 에너지, 무역, 금융 등 러시아 경제 전반에 광범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러시아 실물경제는 물론이고 정책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는 러시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던 북극개발 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 정부가 진행 중인 북극 자원개발, 북극항로 개발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실질적 영향을 받고 있다. 북극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발전략들을 채택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감안할 때 이번 사태가 러시아의 북극개발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북극개발에 대한 과제와 방향성을 파악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본 글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 정부의 북극개발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 간략히 다루고자 한다.

II.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시아 경제제재

우크라이나 사태의 시작과 동시에 미국과 EU 등 서방 국가들은 곧바로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단행하였다. 사실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는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당시의 경제제재 내용을 보게 되면 러시아 내 개인과 주요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부터 에너지, 금융, 군수 등의 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 수출과 기술협력 금지까지 주요 산업에 대해 포괄적 제재를 시행함으로써 러시아의 경제성장을 압박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같은 경제제재는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방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저항력을 높임과 동시에 서방에 대한 투자 규모 축소 및 외환보유고 내 달러 비중 조정 등의 적극적 외환 관리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금번 사태로 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면교사 차원으로 미국과 EU 등 서방은 러시아의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단행하고 있고 그 범위와 압박수위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서방 국가들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러시아의 개인,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 제한, 자산동결, 신규차입과 투자 금지를 비롯해 러시아의 주요 은행들을 SWIFT에서 배제하는 강력한 금융제재를 단행하였고, 대러시아 수출통제 및 러시아의 최혜국대우(MFN) 조치의 중단, 나아가서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러시아 産 에너지 금수 조치까지 제재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는 모습이다.

<표1: 주요 대 러시아 경제제재 현황>

구분	내용	주요 참여 국가
자산 동결 및 금융제재	주요 러시아 금융기관 및 자회사 금융거래 제한, 자산동결, 신규차입과 투자 금지	美, 캐나다, EU, 韓, 日
신규 자본 취득 제재	러시아 13개 법인의 신규 지분 취득 및 거래 금지	美
SWIFT 배제	러시아 7개 은행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배제	美, 캐나다, EU, 韓, 日
미국 수출통제(FDPR)	수출통제목록(CCL) 유형 번호 중 3~9에 속한 경우.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네비게이션 및 항공전자기기 △해양 △추진시스템, 우주선 및 관련장비 부문의 시스템, 설비, 부품/장비/재료/소프트웨어/기술	
수출 제한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 제한(반도체, 최첨단 기술 포함)	EU
최혜국대우(MFN) 중단	MFN 지위 취소, 러시아 産 수출품 고율 관세 적용	美, 캐나다, EU, 日
러시아 에너지 금수	러시아 産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입금지	美
러시아 에너지 부문 제재	신규투자 금지 및 관련 장비, 기술, 서비스 수출 제한	美, EU

자료: 각종 자료 바탕으로 저자 정리

한편 각국 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함께 러시아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도 악화되었다. 이에 식품, 에너지, 항공, 자동차, 금융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러시아에 진출한 많은 각국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 철수나 외부 압력에 의한 영업 중단 사례도 늘어가면서 민간 차원의 러시아 경제 제재 동참도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제재 환경 속에서 러시아 경제에도 실질적으로 산업 전반에서 점차 물류 및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확대, 실업 증가 등의 경제 충격이 나타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핵심 산업에서의 투자 제한과 기술력 부족, 인재 유출, 공급망 문제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을 비롯한 경제 전반 장기 침체 등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¹⁾ 동시에 이로 인해 러시아 정부의 중점 과제 중 하나인 자원개발과 인프라 확충 등 지역개발에서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러시아 정부가 미래 국가발전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고 있는 북극지역개발이다.

Ⅲ. 우크라이나 사태의 러시아 북극개발정책에의 영향

러시아 정부는 2020년 한 해 동안 자국의 중장기적 북극전략으로 [2035 북극정책 기본원칙], [2035 북극항로 인프라 개발계획], [2035 북극 개발 및 국가안보전략] 등을 차례로 발표하면서 북극개발을 위한 국가의 큰 그림을 완성하였다. 특히 위와 같은 북극개발의 마스터플랜은 북극지역에서 러시아의 확실한 주도권 속에서 에너지 자원개발, 북극항로(NSR)와 지역 인프라 개발 및 현대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방위적인 ‘조직 개편’, ‘법률 개정’, ‘대규모 투자 계획’을 추진하며 북극지역을 러시아의 핵심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²⁾

그러나 이 같은 러시아 정부의 북극개발전략과 비전에도 불구하고,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과 이에 대한 대러시아 경제제재는 러시아의 북극개발전략에 직접적으로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의 북극개발전략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개발과 북극항로 개발은 상당부분 해외의 자본과 기술 등 프로젝트 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각국의 제재는 러시아의 개발전략에 큰 차질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EU 등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러시아의 북극개발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① 북극지역 에너지 자원개발

러시아의 북극전략에 있어 석유, 천연가스, 광물 등의 에너지 자원개발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북극지역의 천연자원을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국가경제발전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의 에너지 개발 사업에 관심 있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 공동 또는 합작으로 개발, 탐사, 생산 및 시추 활동을 진행해왔다. 실제로 에너지 기업인 Exxon-Mobil, ENI, Total, Statoil, CNPC 등은 러시아 기업들과 함께 해당 활동들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실시되며 러시아 정부의 의욕적인 북극지역 자원개발은 난항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당시 서방의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1) The Moscow Times, “Central Bank Survey Says Russia’s Economic Outlook Worsens,” 2022.04.21.

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러시아의 新 북극전략’ 행보에 주목해야” 「KMI 극지해소식」 73호(2019).

제재는 향후 에너지 생산 잠재력이 있는 분야, 즉 심해 지역 및 북극해 그리고 셰일층 개발에 필요한 기자재, 탐사 및 시추 등의 서비스 부문에 대해 적용되었다.³⁾ 이 지역에 대한 자원 개발의 경우 서방의 기술적 협력이나 자본 없이 러시아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였기에 러시아정부의 개발계획에는 타격이 불가피하였다. 경제제재의 여파로 Exxon-Mobile, ENI, Statoil 등 서방 기업의 러시아 북극지역 자원개발 탐사 및 시추 프로젝트들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잠정 중단되거나 철수하는 상황을 맞았다.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의 북극 에너지 자원개발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미국과 EU 등 서방의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이번 제재는 기존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기자재, 기술, 서비스 공급 금지조치의 연장과 함께 신규 투자 및 대출도 금지되었으며 그 범위도 이전까지 러시아 내 심해, 북극 및 셰일 탐사 및 생산에 국한되었던 것이 러시아 내 모든 프로젝트로 확대 적용되었다.

실제로 이번 경제제재의 시행 이후 많은 에너지 기업들이 러시아 사업에서 지분 매각 등 전면 철수 결정을 내리거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동결하는 결정을 발표하였다. 북극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한 에너지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결정을 내렸다. 이탈리아는 노바텍(Novatek)이 주도하는 ‘북극 LNG-2’ 사업에 대한 210억 달러의 자금 대출을 중단하였고, 프랑스의 Total과 일본의 Mitsui는 동 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를 동결하였다.⁵⁾ ‘북극 LNG-2’ 사업 중 엔지니어링과 조달 및 건설에 관여하는 독일의 Linde, Siemens 등도 장비 공급 중단과 러시아 내 사업 축소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사업의 주체인 노바텍은 해당 사업에 대한 중단을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동 사업의 3개의 생산라인 중 90% 정도의 완성도에 도달한 1번 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라인에 대한 계획을 전면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⁶⁾ 결과적으로 대러시아 제재로 인해 러시아 북극지역 자원개발의 최우선 과제였던 해당 사업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사업의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한편 북극지역에서 러시아의 또 다른 대형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인 ‘Vostok Oil’ 역시 불확실성의 확대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해당 사업에 참여 중인 싱가포르의 Targa는 지분과 관련한 옵션을 검토 중이며 사업 주체인 로스네프트(Rosneft)의 지분 19.75%를 보유 중인 BP도 지분 매각 계획을 밝혀 사업의 자금조달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3) 김상원, “서방의 경제제재와 러시아의 북극개발: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32권 4호(2017). Pp. 27-58.

4) 에너지경제연구원, “러시아의 북극지역 자원개발 동향과 전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7호 (2016).

5) Institute for Energy Economics and Financial Analysis(IEEFA), “Japan and France have halted investments in Arctic LNG 2 project,” 2022.03.25.

6) The Barents Observer, “Big collapse looms over Russian Arctic policy,” 2022.0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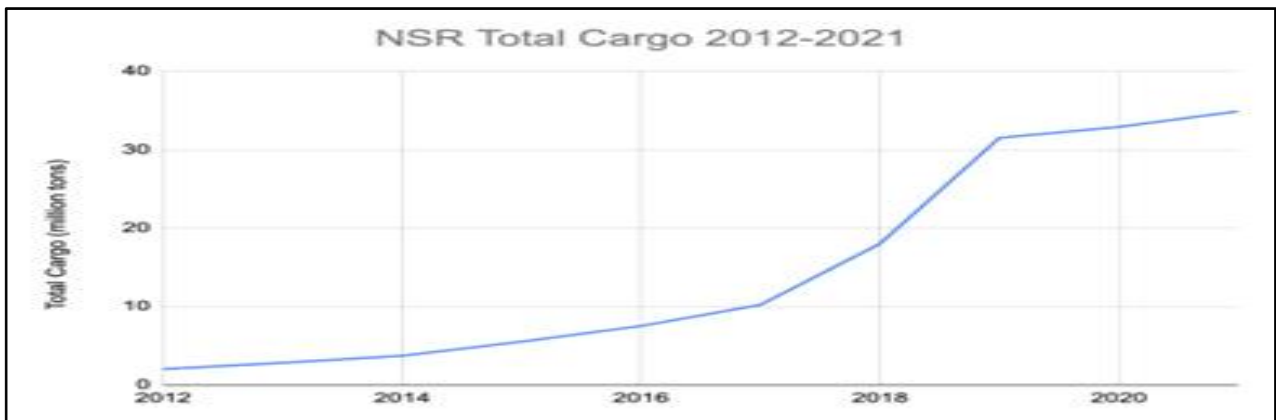
<그림1: '북극 LNG-2' 사업>



② 북극항로(NSR)와 인프라 개발

현재 북극항로는 주로 북극지역의 러시아 에너지 자원 수송에 의해 개발되고 있고 실제 대부분의 화물도 원유와 천연가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앞서 북극지역에서의 자원 개발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자연스레 러시아 정부의 북극항로 개발과 이와 연계된 주변 인프라 개발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진다. 앞서 2018년 푸틴 대통령은 2024년 북극항로의 목표 물동량을 8천만 톤으로 제시하면서 북극항로 개발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노바텍의 '야말-LNG'의 생산 시작과 함께 북극항로의 물동량은 큰 폭으로 증가해왔으며 2021년에는 3,500만 톤의 물류량을 기록하였고, 2022년에는 약 4천만 톤까지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와 같은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해서 상당수의 물동량을 책임지고 있던 각국의 주요 선사들이 러시아행 운행을 중단하거나 원유, 천연가스 등의 수입도 줄면서 항로의 운항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2>: 북극항로 물동량 추이(2012-2021)>



이와 함께 대러시아 제재는 북극항로의 LNG 운반선 및 쇄빙선 건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러시아 국영선사 Sovcomflot를 비롯한 러시아의 선박 및 조선소가 제재의 선상에 오르게 되면서 운반선 및 쇄빙선의 건조 및 인도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고, 선박의 장비나 시스템 등의 수출 및 기술협력 자체가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서방의 제재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들에 대해서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지만 상당수의 선박건조나 기술협력 등은 러시아의 금융 제재에 따른 손실, 제재위반과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우려로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기존 선박의 수리를 위한 부품의 공급 및 조달에도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편으로는 이 같은 북극항로의 물동량 감소와 선박 건조에서의 차질은 전체 물동량의 감소와 북극지역 내 안정적인 운행 감소로 북극지역내 원주민들에 대한 물류망을 혼란케 할 뿐만 아니라 북극지역 인프라 개발 및 현대화에 필요한 국가의 재원이나 역량 집중을 어렵게 하여 해당 지역 인프라 구축 계획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업 전반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에 대응해 러시아 정부는 북극항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기화물 운송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성명을 발표하거나 인프라 개발 지속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상황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 북극개발정책에 미친 경제적 영향 외에 또 다른 부문으로는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여러 국가들 간의 북극지역에서의 국제협력이 어려움에 처하였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를 제외한 북극이사회 7개국은 현재 의장국을 맡고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 및 회의참석을 보이콧하면서 북극권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이 일시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극지역의 긴장고조로 인해 해당지역 원주민 지원, 비상사태 시 협력 메커니즘 등 기본적인 국가 간 협력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IV. 러시아 정부의 대응과 앞으로의 북극개발정책 방향성

대러시아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기존의 북극개발정책이 어려움에 직면하자 러시아 정부는 북극 개발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극개발의 중요성과 관련 사업 및 계획 지속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극개발계획의 실현을 강조하며 북극항로 인프라의 구축 및 현대화, 선박 건조 및 항해 장비에 대한 생산 및 수입대체화, 장기적 관점에서의 북극 공급망 재건과 협력국가 다변화, 북극지역 고위도철도 프로젝트 건설 착수, 북극항로 물동량 목표 달성과 단일 운송기관 지정 등을 언급하였다.⁸⁾

이중 북극지역에서의 러시아 공급망 재건에 대한 지시는 실질적으로 러시아 정부가 대러시아

7) 북극이사회는 북극권 8개 국가인 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핀란드 간의 협의체로서 북극권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임.

8)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Совещание по вопросам развития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2022.04.13.

제재의 영향으로 북극지역에서 에너지 자원이나 북극항로 개발계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지역에서의 협력국가 다변화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북극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형 에너지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기자재 및 기술 협력을 지원해줄 수 있는 파트너가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러시아 정부의 대응방안 강구와 대책마련에도 불구하고 현재 러시아 정부의 북극개발정책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도 정책 실행 전반에서 상당히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극지역에서 러시아 정부의 지원 하에 추진 중인 프로젝트들이 460여개나 되며 투자금액 역시 1.3조 루블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⁹⁾ 전쟁 비용 조달과 국내 경기 안정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어서 충분한 자원 활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며 국제 사회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확대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북극개발 사업의 협력 및 러시아 자원 수출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북극지역의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로 인해서 러시아 정부의 북극지역개발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계획과는 달리 자금조달과 계획방안은 상당부분 수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당기간 새로운 프로젝트나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항로운항 등 기존의 사업을 지속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이나 인도 등 북극지역으로의 진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당지역에서의 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개발 자금을 조달하거나 관련 산업에서의 수입대체산업화에 도움을 받고자 할 것이다.

또 현재는 일시 중단되어 있지만 그 중요성이 높은 북극지역 국제협력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협력을 재개해 나가고자 할 것이다. 특히 북극지역의 절반 이상을 통제하고 있는 러시아는 북극지역의 핵심 이해관계자로서 관련 국가들이 러시아를 제외하고 동지역의 환경이나 원주민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는 어렵고 러시아 역시 협력 동력의 완전한 상실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북극지역에서의 수색 및 구조, 비상사태 시 협력 등과 같이 기존 국가들 간 법적 구속력을 갖춘 계약들의 경우 인도주의적 성격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협력재개를 위한 시작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러시아 정부는 북극의 잠재적인 가치에 주목하여 북극개발정책을 수립하였고, 많은 관심 속에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과제들을 하나씩 진행시켜 왔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과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의 북극개발정책에 상당한 부정적인

9)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Совещание по вопросам развития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2022.04.13.

영향을 미침으로서 중장기적인 계획 이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실시된 대러시아 경제제재는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며 경제적 차원에서 에너지 자원개발과 인프라 개발 등 러시아의 북극개발을 도전에 직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동안 북극지역에서 협력 국가였던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NATO) 가입을 가시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북극지역에서의 긴장도 한층 고조되었고 국가들 간의 협력 동인도 많이 약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북극이 가지는 중요성과 가치를 고려할 때, 러시아 정부의 북극개발정책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극지역에는 아직 상당한 양의 에너지 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북극항로에 대한 높은 관심도 여전하며 연구 가치도 높다. 또 주변 국가들이나 북극 국가들 간 협력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 사태로 인한 러시아의 북극개발정책과 주변국들 간의 협력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급한바와 같이 북극지역에서의 러시아 정부의 개발계획이나 국가들 간의 협력은 새로운 방식으로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은 북극이사회에 옵서버로 참여하며 러시아의 주요 협력파트너로서 북극지역 진출이나 협력에 참여하고자 하는 한국에게 있어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한국은 2014년 크림반도 사태 당시와 달리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는 대러시아 경제제재 참여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진행 중인 기존 북극 관련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상당기간 동안 협력 확대에도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러시아와의 북극 협력에 있어 동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진행 중인 협력사업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사태 및 러시아 정부의 북극 개발정책 향방을 예의주시 해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기회가 있을 경우 북극 원주민 지원, 수색 및 구조, 연구협력 등 상대적으로 정치적 환경에 덜 민감한 부문의 협력에 대해 참여방안을 모색해 봄으로 향후 북극지역에서의 협력 강화 및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볼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환경문제와 환경 CSO의 역할 - 북극권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

차명제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 공동상임대표)

1. 들어가며

러시아의 환경문제는 지구상의 그 어떤 국가보다 다양하고 또한 치명적이다. 적도나 열대지방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환경문제들을 러시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상호 연관성을 갖는 복합적이며 동시에 그 부작용은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되어 기후위기를 촉진시키고 있다¹⁾.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의 환경문제는 치명적인 것이다. 러시아는 11개의 시간대가 존재하는 동유럽과 아시아 북부에 걸쳐있는 세계 최대의 영토를 가진 대국으로 여러 나라의 환경문제가 러시아 한 나라에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 러시아의 북극권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인류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북극해의 해빙과 해양오염, 툰드라지대의 동토가 녹으면서 얼음 밑에 봉합되어 있던 막대한 양의 메탄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동시에 각종 고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등의 다양한 균류들이 대기권으로 방출되면서 지구 온난화를 가속 시킬 뿐만 아니라 이 균류들에 의한 피해는 아직 과학적으로 파악되지 않는지만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비트 19 보다 그 영향력이 훨씬 강력할 수도 있다고 한다. 고대 균류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기에 그 영향력에 대해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현재의 팬데믹 상황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한다²⁾.

그러나 크고 작은 환경문제는 인간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발생하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국가와 국민들의 의지이다. 아무리 작은 환경문제라도 그 국가나 국민들이 무시하고 방치하면 그 작은 환경문제가 회복 불능의 심각한 환경과 사회문제로 진화하기 마련이다. 반대로 아무리 불가역적 환경문제라도 국가나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극복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러시아의 국가와 국민들은 그 나라의 크고 작은 환경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노력하는가가 해결의 관건이다. 러시아의 경우는 환경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1) 그 예가 바로 얼음바다가 녹으면서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남/북극의 빙해(氷海)가 해빙(解氷)됨으로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해수면이 상승하여 남태평양의 섬들이 물에 잠기고 연안의 도시들이 침수 위협을 받고 있다.

2) 2016년 여름 러시아의 야말로네네츠 자치구에서 12세의 목동이 탄저병으로 숨졌는데 주민 20여 명도 감염되었고 순록 2,000마리 이상이 죽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탄저병으로 죽은 동물의 사체가 공기 중에 노출되어 병이 퍼졌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이런 균류들이 노출되면 그 팬데믹의 규모가 어떨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2020년 9월 23일자 인터넷판)

런 상황이면 작은 환경문제도 해결이 어려울 만큼 심각한 문제로 확대될 것이며, 북극권의 오염과 같은 불가역적 환경문제는 인류 생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일인 독재체제가 장기기간 유지되고 정적들은 암살과 테러를 당하고 시민사회가 압살 당하는 상황에서 환경문제는 정부의 정책순위에서도 후순위이며, 국민들도 환경문제에 대한 민감성과 감수성을 가질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후 인류가 환경문제를 민감하게 인식한 이후 문제 제기도 해결을 위한 노력도 예외 없이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진행되었다. 국가와 국민을 강조한 이유는 일종의 공식으로 문제 제기는 시민사회가, 그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국가가, 그리고 해결을 위해 행동하고 실천하는 주체는 국민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에는 이런 시민사회도, 국가도, 국민도 없다. 또한 특정 국가의 국민들이 환경문제에 둔감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외국의 환경단체들이 대신 노력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이러한 외국 환경단체의 활동도 감시하고 강하게 억압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러시아의 환경문제는 그 어떤 해결 주체도 존재하지 않는 체그야말로 통제 불능의 폭주 기관차로 비유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 얼마든지 조작도 가능하겠지만 - 푸틴대통령은 국민들의 80% 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끝도 보이지 않는 침략전쟁을 치루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초토화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가공할만한 무기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자연을 파괴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푸틴이 공언한 것 같이 이 전쟁이 확산되어 핵무기를 사용하는 3차 세계 대전으로 비화한다면 인류의 역사의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러시아의 환경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지적 사치임을 밝히면서 이 글을 쓰려고 한다. 왜냐하면 전쟁도 언젠가는 종식될 것이고 러시아의 환경문제도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할 인류의 과제이기에 그 문제점을 이 글을 통해 짚어 보려고 한다.

2. 러시아의 예외주의(예외적 국제적 지위)

러시아는 아시아 국가도 아니고 또한 유럽국가도 아니다. 유럽에서는 칼 맑스의 지적대로 “반(半)아시아적인 야만 국가”로 인식되어 왔다. 현재에도 이러한 인식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다. 현재 서구권에 속하는 국가들 중 한때 제국주의의 종주국이었던 국가들이 많다. 그러나 이들 중 현재 제국주의를 추구하려는 국가는 없다. 그러나 러시아는 예외이다. 현재의 침략전쟁은 구소련의 영광의 재현, 더 나아가 역사상 단 한번도 실재하지 않았던 대(大)러시아 실현의 과정으로 이런 침략전쟁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³⁾. 푸틴 일인의 파시스트 정권은 유럽의 역사에서도 찾기 어렵다. 아마 고대 로마의 제정시대를 제외하곤 말이다. 무솔리니나 히틀러조차도 일인이 아닌 그를 지탱하는 핵심 추종 집단들이 존재했다. 심지어 킬링필드로 유명한 컴보디아의 크메르루즈조차도 일인이 아닌 집단지도체제였었다. 그러나 러시아 현대사에 스탈린 이후 두 번째 독재자가 등장한 것이다. 어찌 보면 그는 스탈린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

3) 러시아 제국시기의 러시아 영토는 대영제국과 몽골 다음으로 역사상 세 번째로 광활했다. 이 시기에는 현재와 같은 행정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통치행위가 부분적으로만 작동했기 때문에 푸틴은 제국 건설의 야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

다. 이런 러시아를 문명의 중심이라 자부하는 유럽국가들에서는 절대 유럽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유럽국가들은 “유럽의 문명을 위협하는 침략자”로 현재의 러시아를 규정하고 있어 적어도 금세기에는 유럽의 일원이 될 일은 없을 것이다.

러시아의 예외주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비동시성의 동시성 현상이다. 물질적으로는 천연자원 개발에 힘입어 대도시 중심으로 초현대식 건물이 즐비하며 올리 가르히는 아니더라도 상류층들은 세계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부를 축적하고 향유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를 벗어난 농촌지역에서는 여전히 봉건적 질서가 지배하고 있다.

- 중세 이후 러시아에서는 민주주의가 실현될 기회가 거의 없었다. 왕조나 국가 체제의 이행기에 간헐적으로 시민들의 주장이 관철되기도 했지만 국가 체제로서 근대 민주주의 공화국은 존재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1910년대 제정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 이행기나, 소련연방공화국이 해체되고 러시아공화국으로의 이행기에 러시아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할 기회를 가졌으나 곧 이른 권위주의 체제의 확립으로 국민들이 자유를 제대로 향유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은 언제나 억압되고 받탈 당하기만 했다.

- 독재의 정당성

2007년에 실시된 러시아의 총선에서 푸틴 지지자들은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관에 넣고 장례식을 치렀다.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는 러시아 실정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그들의 식민지로 전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 대신 그들은 주권민주주의를 주창하며 러시아식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임기를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중임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그 결과 푸틴은 2008년까지 중임을 하고 그해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고 총리로 대통령 막후에서 실질적으로 통치하였다. 그리고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연히 당선되고 2018년 재임에 성공한 뒤 2024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20년 이상의 일인 지배체제를 러시아인들의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것이며 현재에도 그에 대한 지지도는 80%를 상회하고 있어 그의 일인 지배체제는 그가 포기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러시아인들이 주장하는 러시아식 민주주의 핵심이다.

- 지구촌의 공적으로 전락한 러시아

푸틴의 파시즘적 통치를 견제할 아무런 장치가 없는 러시아의 상황은 가히 파멸적이라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이 어떻게 종식될지,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전망하기란 아직 쉽지 않다. 그러나 전쟁 중에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은 끔찍하기만 하다. 유럽의 빵 공장이라 불리울 정도로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은 전 세계 8%를 차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2021년, 8400만톤의 곡물을 생산하였으며 밀 2500만톤을 비롯하여 6500만톤의 곡물을 수출했으나 2022년에는 전쟁으로 수출량이 대폭 축소되어 이 나라의 곡물 수출에 의존하는 이집트와 같은 중동 국가들은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주요 천연자원 수출국인 러시아도 전범으로 지적되어 세계가 이 나라의 자원 수입을 거부함으로써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여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세계 경제는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 즉 한 사람의 야망과 오만에서 비롯된 그릇된 판단과 결단이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고 전 인류에게 불행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예측 못할 환경재앙까지 포함시킬 경우에는 지구상에서 호모사피엔스라는 종도 사라지는 멸종사태까지도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러시아와 러시아인들에 대한 세계인들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러시아 제품에 대한 보이콧은 당연하고 세계 각국들은 일부를 제외하곤 러시아에 물건의 판매를 금지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치와 관계없는 러시아의 세계적인 예술인조차도 공연금지를 비롯하여 전 세계 예술 무대에서 퇴출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러시아에 우호적인 서방의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⁴⁾. 그야말로 러시아는 지구촌에서 공공의 적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전 세계의 러시아에 대한 거리 두기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 같으며 시간이 지나 해소된다 고 하더라도 이때는 러시아의 존재감이 무시되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확립되어 있을 것이다.

3. 러시아의 환경오염 현황

1) 원인

- 구소련연방공화국의 환경문제 계승: 일반적으로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는 환경문제를 애써 무시하거나 자본주의 탓이라고 선전하였다. 환경문제는 그러므로 국가에 의해 사회적 공론화가 불가능했고, 따라서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한 이해나 감수성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국가들의 환경문제는 당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 훨씬 심각했었다. 환경문제가 공론화되어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고 국민들이 국가의 정책에 비판적 태도를 갖게 되는 것에 대해 국가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근대국가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환경문제가 러시아에 존재하고 국가와 국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무관심과 무대응이 여기에 더해지는 악순환이 확대 재생산 되고 있다.
- 소련연방공화국에서 러시아공화국으로 전환 된지 이제 30여 년이 되었다. 러시아는 근본적인 체제전환 없이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한 채 권위주의체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이 체제는 환경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오히려 이 정부는 북극권 자원 개발을 촉진하는 와중에 기름 유출과 같은 대형 환경오염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 지구 온난화로 인한 현재의 기후 위기 상황은 러시아에게 양면의 칼날과도 같다. 즉 온도 상승으로 북극해가 녹으면서 북극 항로가 열리고, 동토가 녹아 인간의 거주와 활동 영역이 확대되어 자원개발을 촉진시키고 거주지가 확대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지층사이의 얼음이 녹아 땅이 꺼지는 싱크홀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건물이 무너지는 등의 인간 생활에 위협이 되기도 하고 얼음에 갇혀 있던 각종 유기물들이 분해되어 만들어진 막대한 양의 메탄가스가 대기로 유출되어 각종 화재를 발생시키고 동시에 지구 온난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⁵⁾. 또 다른 위험은 바로 각종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균이 대기로 방출되면서 원인 모를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4) 독일의 제7대 수상인 게르하르트 슈뢰더는 러시아의 주요 석유 회사인 가스프롬 고문으로 재직하는 등의 친러시아 행보 때문에 독일연방의회의 결정으로 최근 퇴임 수상이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모든 혜택이 박탈 당했다.

5) 영구동토층과 찬바다의 해저에 메탄이 묻혀 하이드레이드를 형성하고 있다. 이 메탄하이드레이드는 불타는 얼음이라 불리우기도 하며 주요한 에너지원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기여도는 이산화탄소의 약 80배가 된다. 그러므로 이 메탄이 대기로 유출되면 현재의 지구 온난화 속도를 훨씬 빨리 촉진시킨다.

질병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어서 현재 코로나 19와 같은 팬데믹 상태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환경오염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현대적 인프라를 갖지 못했다. 폐기물 처리의 경우 러시아의 생활폐기물의 90%는 매립되고 있다. 러시아의 폐기물 매립지 면적은 약 400만 헥타르로 약 1만 5천여 개의 허가된 매립지가 있지만 그 이상의 미승인 매립지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미허가 매립지에 쓰레기들이 장기간 방치되어 토양과 수질(지하수)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쓰레기 재활용 비중도 2020년에 3.6%에 불과하여 한국의 재활용률인 86.5%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다.
- 철도와 도로, 상하수도 관의 노후화, 하수종말처리장과 상수도 정화시설 등이 낙후되거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로 인한 토지와 지하수, 하천과 호수, 대기 등의 오염에 원인이 되고 있다.
- 또한 폐기된 구소련시대의 핵추진 함정과 잠수함 등도 부실한 상태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주변 지역의 방사능 오염도 심각한 상황이다.

2) 현황

- 하천오염: 길이 약 3,700km의 볼가강에서는 러시아 전력의 5%를 생산하는 수력발전을 위한 댐들로 가로막혀 있고, 강가에 즐비하게 늘어선 공장들과 농장 가축들의 오폐수, 도시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폐수와 송유관 사고와 유조차 전복 등으로 하천과 토양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훼손되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하천과 호수의 녹조현상은 어디서나 발견되는 평범한 현상이 되고 말았다. 또한 볼가강은 모스크바를 비롯한 주변 도시들의 식수원이 되고 있으나 오염으로 인해 이미 음용수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이다. 이런 상황은 비단 볼가강뿐만 아니라 돈, 우수리, 아무르 등 70여 개의 하천과 30여 개의 호수가 갖는 공통된 문제이며 이들의 대부분은 허용치의 300배를 초과하기도 한다. 이런 오염된 물로 인해 장티브스나 콜레라 같은 수인성 전염병의 창궐하기도 한다⁶⁾.
- 대기오염: 대부분이 화석연료(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목재)를 사용하는 산업시설과 일반 가정, 다양한 운송수단(기차와 자동차 등)에서 뿜어내는 매연과 이산화황, 분진 등의 온실가스 등으로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 오염도 심각한 수준이다. 도시에 거주하는 6천4백만여명은 심각한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도시들의 공기의 질은 공기오염 한계치의 1.20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오염으로 폐암과 폐결핵 등의 호흡기 질환과 피부병, 그리고 암 발생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대기오염으로 매년 6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다. 알코홀의 중독이 아닌 오남용으로든 매년 3만6천여명이 사망하기도 한다. 특히 공기와 수질 오염으로 아이들의 건강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유아사망률은 아프리카의 개도국 수준이라고 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 8%만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중 5%만이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p. 69)
- 토양오염: 2020년 러시아의 폐기물 총량은 약 70억톤 가량이며 이들 대부분은 매립된다. 이 중 재활용 비율은 매우 낮다. 그러므로 후진적이고 부실한 폐기물 처리 정책으로 중금속이나 독성이 강한 폐기물과 폐유 등이 토양을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또한 군사시설에서 배출하거나 무단

6) Gumpel, Werner, "Umweltprobleme im heutigen Russland", in *Auslandinformation*, P.64.

매립하는 폐유를 비롯한 폐기물들은 어느 정도인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 방사능 오염: 러시아에는 적어도 31개의 원자로가 운영되고 있는데 매년 방사능 유출을 비롯한 냉각수 유출, 방사능 폐기물의 관리 소홀 등으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Ozersk, Seversk, Zelensnogorsk 등은 원자력발전소를 핵 관련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다. 이곳에서 유출되는 방사능 유출 사고는 체르노빌을 능가한다고 하며, 강과 호수 바닥에는 방사능 폐기물이 쌓여있고, 핵폐기물 저장소도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 콜라반도와 Barentssee의 방사능 오염은 특히 심각하다. 이곳에는 수십척의 핵추진잠수함과 핵추진쇄빙선들이 폐기되어 침몰되거나 바다에 버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G8(G7+러시아)회의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지원을 하기로 결정했고 3억유로를 지원했으나 이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러시아의 환경전문가들이 말했다.(p.73) 다른 나라와 달리 러시아의 방사능 오염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러시아인은 극히 소수이고,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 경찰에 체포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자원개발과 이를 위해 무분별하게 건설된 부대시설과 거주지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생태계 파괴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특히 북극권 지역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
- 이와 같은 심각한 오염으로 인해 러시아인들은 암, 피부병, 폐결핵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992년 - 2003년 사이에 8백만 명의 인구가 감소했다. 또한 1990년 남자의 평균 수명이 64세였는데 2003년에는 58.8세로 단축되었다. 여자의 경우 같은 시기에 74.4세에서 72세로 단축되었다.

4. 러시아에서의 민간 환경단체의 역할

환경CSO⁷⁾로 불리우는 민간환경단체는 환경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환경문제는 정부나 기업보다는 민간이 앞장서서 여론화, 공론화를 시켰으며 환경정책들도 예외 없이 이들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였다. 그러나 환경단체 중 CSO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정부가 설립한 환경단체도 있고 전적으로 정부의 보조금이나 기업의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는 환경단체도 있다. 이 단체들은 기업이나 정부의 이해관계나 지시에 따라 활동하기에 이들의 산하단체나 소속기관의 부설단체이다. CSO는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일수록 그 수도 많고 사회적 영향력도 크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이념과 종교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국가권력에 대해 비

7) 지금까지 민간단체, 혹은 시민단체를 NGO라 불렀다. NGO는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의 약자다. 1945년 10월 UN이 창설되기까지 국가기구가 아닌 적십자를 비롯한 민간기구의 역할이 매우 컸다. 그래서 UN에서는 국가와 비국가를 분류하기 위해 비정부기구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그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정부기구, 혹은 민간이나 시민단체를 NGO로 불렀다. 그러나 이 NGO는 비영리, 정치적 중립, 회원 중심, 공익성 추구, 자율적 운영 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간단체는 이윤도 추구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띠며,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이나 지원금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간단체는 더 이상 NGO로 규정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NGO 대신 CSO란 용어를 사용하며 UN도 NGO와 CSO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CSO는 문자 그대로 Civil society Organizations, 즉 시민사회단체이다. 그러므로 필자도 NGO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CSO를 사용하기로 한다. 환경CSO는 민간환경단체를 의미한다.

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1) 환경CSO의 성립조건

- 시민운동의 토대가 되는 민주주의와 시민사회가 발전해야 한다.
- 경제적인 발전도 중요하다.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경제적으로 발전한 선진국들이다. 시민운동은 예외 없이 자발적 참여와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므로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야 한다. 즉 생계를 위한 노동과 공익성을 지향하는 무보수의 사회 활동을 병행할 수 있어야만 시민들이 본인의 취향과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스스로 조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발전도 시민운동이 발전할 수 있는 필요 조건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 이런 행동하는 시민들은 바로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만 출현할 수 있다.
- 소득 수준이 높은 중산층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회집단들이다. 고등교육은 비단 전문성 교육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와 문화교육을 받았을 확률이 높으며 이런 교육을 통해 높은 사회적 욕구와 사회 현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종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감수성과 통합적 사고능력을 갖고 있다.
- 그러므로 이들 행동하는 시민들은 일방적인 주장이나 국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다. 특히 삶을 위협하는 여러 사회 현상과 문제들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국가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그러므로 환경단체를 만들어거나 이 단체에 참여하여 공공의 삶을 위협하는 사안들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며, 원인 제공자인 기업이나 정부에 대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 요약하면 환경CSO의 성립 조건으로는 민주주의 체제, 경제적 안정, 고등교육을 받은 광범위한 중산층, 시민사회의 활성화 등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예외도 있으나 대개 이러한 선진적 사회나 국가에서 시민운동이 발달하기 마련이다.

2) 러시아 환경CSO의 현황

- 환경오염이 심각한 곳에서 환경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 단체들은 대개 쓰레기 매립지나 소각장 등의 문제들이 많은 곳이나 도로나 철도 건설로 인한 주민 불만이나 생태계가 파괴되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 환경운동은 비단 Moskau나 St. Petersburg와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Irkut나, Nischnij, Nowgorod, Nowosibirsk, Murmansk, Archangelsk 등의 주소 규모의 도시에서도 활성화되어 있다.
- 이들 환경CSO의 활동 영역은 주로 환경권 보장과 환경정의 추구 등과 같은 가치지향적 운동으로부터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비중 확대 등의 환경정책 분야, 그리고 토지와 수질 오염 등으로 파괴되는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한 운동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 그러나 러시아는 이러한 시민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정치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기업이나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거나 지시를 받는 단체들은 이들을 비판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 반면 자율적인 CSO는 공익적 관점에서 비판적인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인적·물적 자원이 빈약

하다. 이 CSO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참여자(회원)가 부족하고 회비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 자율적 운영이 어렵다. 그러므로 이런 러시아의 CSO는 재정의 대부분을 외국의 재단이나 CSO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외국으로부터의 지원이 없다면 활동이 불가능한 단체들이 대부분이다.

- “바이칼 환경물결”이라는 단체는 해외에도 많이 알려진 환경단체로 2006년 동시베리아와 태평양을 잇는 송유관 반대운동과 바이칼 호수 주변에 건설 예정인 제지공장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송유관 건설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송유관에서 사고로 석유가 유출될 경우 주변 토양과 바이칼 호수의 오염 방지를 위해 반대한 것이다. 그리고 제지공장 건설 반대 역시 바이칼호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지공장은 주로 호수와 하천 주변에 건설되는데 이는 막대한 양의 공업용수를 손쉽게 공급받을 수 있으며 폐수 처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제지공장은 대표적인 공해산업이다. 그러므로 환경단체는 이렇게 막대한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 그러나 2012년 러시아의 푸틴정권은 시민운동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해외불순세력 방지법”을 공포하였는데, 이는 국내 시민운동의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서였다. 러시아의 CSO를 외부와 단절시키면 이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 법으로 러시아에서의 시민사회운동은 급속히 와해되었다.

3) 러시아 환경 CSO의 역사

-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특히 서구의 반핵운동 영향을 받아 구소련연방 전역으로 반핵운동이 확산되었다. 이 시기 서유럽에서는 특히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반핵평화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었고 당시 동독을 비롯한 동구권의 환경운동과 연대활동이 강화되었다.
- 1989년 이후 헝가리와 체코를 비롯한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가 대규모 반사회주의 운동에 의해 해체되었고, 소련에서도 이러한 사회운동이 확산되어 급기야 1991년 소련에서의 공산당 체제가 붕괴하고 민주적인 러시아연방공화국이 탄생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소련에서도 평화적인 사회운동이 확산되었고 이 운동은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의 몰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⁸⁾. 그리고 서구의 영향을 받은 이 사회운동은 시민운동적 특징을 가지면서 그 동안 억압되어 왔던 러시아인들의 민주주의 욕구를 대변할 수 있었고 환경운동도 이러한 시민운동적 맥락에서 활성화되었고 전국적으로도 확산되었다.
- 2012년 CSO 규제법이 제정되면서 환경 CSO는 그 영향력이 급속히 축소되었다. WWF와 Greenpeace와 같은 국제적인 거대 CSO를 제외하면 국내/외의 환경 CSO의 활동은 러시아에서 급속하게 사그러졌다.
- 이렇게 활동이 축소된 환경 CSO들은 환경문제의 공론화를 위해 그들의 활동 영역을 시민사회에서 정치사회로 이동하였다. 그들은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환경문제를 공론화하였다.

8) 이 시기 소련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정책에 의해 시민권이 어느정도 보장되고 정부에 대한 비판도 허용되었다. 그리고 사회환경에서 소련 역사상 가장 자유로운 정치·사회환경이 조성되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자유는 동구권과 소련연방을 붕괴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고 이로 인해 고르바초프는 현재까지 러시아인 다수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고 있다.

- 이런 과정을 통해 실제로 환경운동가가 정치인으로 변신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CSO 내부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⁹⁾.
- 모스크바의 쓰레기 매립장을 Archangelsk로의 이전에 반대하여 한 환경활동가가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 매립지 이전계획이 취소되기도 했다.
- 러시아의 환경활동가들은 구소련시대에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관료 출신들이 많다고 한다¹⁰⁾.

5. 북극권의 환경문제

북극권의 환경문제는 남극권과 함께 우리 지구 환경문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지구 온난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며 그 부작용 또한 지구의 어느 지역보다 크며, 그 결과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1) 북극해의 해빙(解氷)과 지구 온난화

2020년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1980년 이후 북극 평균 기온의 증가는 지구 평균인 섭씨 1.8도 보다 2배 이상인 섭씨 4도가 상승했다고 한다. 그로 인해 얼음으로 뒤덮었던 북극 항로는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선박 통행이 가능할 정도로 얼음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는 러시아에게는 스웨즈 운하를 공짜로 얻은 자연의 선물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해빙은 지구 온난화의 결과이기에 그 부작용은 자연의 재앙일 만큼 심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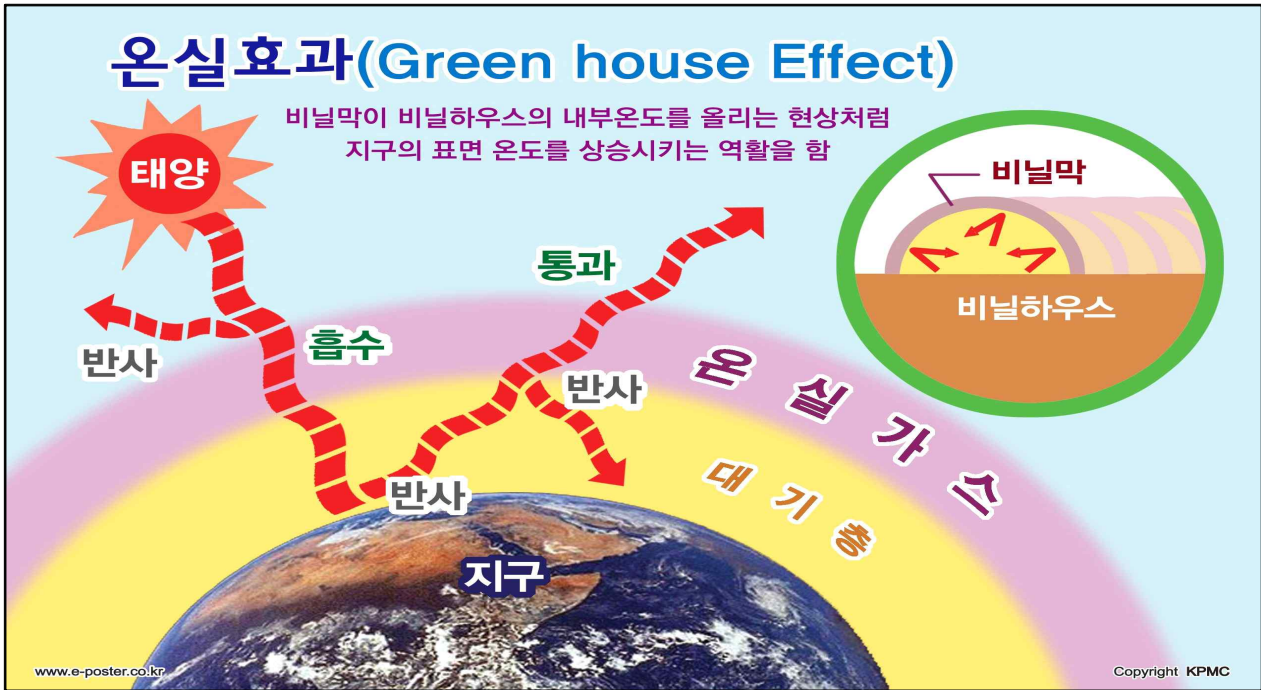
- 얼음은 지구로 유입되는 태양 에너지의 50 - 90%를 반사시켜 지구 평균 온도를 유지시켜주지만 지구온난화로 얼음바다(海氷)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평균온도를 상승시키고 있다. 온실가스가 태양에너지를 대기권 안으로 가두기 때문이다.
- 알베도Albedo반사율(0 - 1 μ m)에 따르면 해양은 0.1 μ m, 하양 눈으로 뒤덮힌 바다는 0.85 μ m, 보통 어름바다는 0.4 - 0.7 μ m이다. 반사율이 높을수록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는데 현재에는 최대 8배 이상 태양 에너지를 대기권 안으로 흡수하고 있다.
- 2005년 8/9월에는 시베리아 해안을 따라 항해가 가능할 정도로 얼음이 녹았다. 현재 속도(섭씨 3.6도 이상)로 상승할 경우 21세기 말까지는 북극해의 얼음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 2015년 파리협약에 따라 UN 회원국들은 21세기 말까지 평균온도 상승 폭을 섭씨 1.5도로 제한한다는 데에 모두 서명을 했다. 만약 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현재 바다의 얼음이 약

9) 사실 이러한 논쟁은 소모적이고 시민사회 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서구의 경우 대부분의 사회운동은 정치세력화하였다. 녹색당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므로 시민운동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요구는 정치 기득권층이 새로운 정치집단의 출현을 저지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 이러한 시민사회 내의 정치참여 논쟁은 흔히 시민사회가 덜 성숙한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10) 이런 현상은 러시아의 특징인 것 같다. 시민사회가 미성숙한 사회에서는 일반 시민보다 관련 직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시민운동가로 변신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중국의 시민운동 활동가들은 기자나 언론인 출신들이 많았다. 일반 시민들은 폐쇄된 사회에서 정보의 접근이 거의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해당 분야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시민운동가로 변신하게 된다.

6% 정도 사라질 것이지만, 이 약속은 이미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대부분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현재의 해빙 속도는 12,000년 이래 가장 빠르다고 한다.

<그림 1: 온실효과 개념도>



출처: <https://www.google.com/url?sa=i&url=https%3A%2F%2Fwww.e-poster.co.kr>

2) 해양(북극해)오염

북극해의 오염은 대개 유류 유출사고가 대부분이다. 그 원인은 선박(유조선)이 좌초되면서 배의 기름이 유출되는 것과 북극 지역의 자원 개발 과정에서 정제되지 않은 석유가 해양으로 흘러들어 가는 경우이다.

- 엑손발데스호 사건: 1989년 엑손사 소속의 유조선 엑손발데스호가 알래스카주 프린스 윌리엄스 만에서 좌초되어 24만 배럴의 원유가 유출되었는데 이는 지금까지 해상에서 발생한 최악의 사고였다. 이곳은 헬기와 비행기, 배로만 접근 가능해 사고 직후 신속한 방제작업이 어려워 피해를 훨씬 기증시켰다. 이 사고는 3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 흔적이 남았을 정도로 그 후유증이 크다. 피해액은 벌금을 포함하여 50억 달러에 달했다. 여름 바다에서의 유류배출 사고는 그 피해의 범위도 다른 바다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고 복구도 훨씬 더디다. 이 사고는 유조선의 선체를 이중으로 건조해야 하는 등의 특별법이 제정되었을 정도로 해양사고의 전환점이 되었다.
- 러시아의 북극권 석유 유출 사고: 2020년 6월 러시아 북부 타이마르 반도 나데스타 열병합발전소의 연료 저장탱크가 파손되어 2만 톤 이상의 경유가 유출되어 암바르비아 강으로 흘러들어 갔고 두께 20cm의 기름띠가 무려 20km가 넘었다. 이 기름띠로 붉은색으로 변색된 이 강은 바다로 흘러들어 하천과 해양을 초토화시켰다. 이 발전소는 노르니켈이 운영하는 열병합발전소였으며 이러한 광물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들을 수용해야 할 도시가 건설되었다. 노릴스크라 불리우는 이 도시는 녹지가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은 그야말로

광산과 정제시설, 발전소와 공장, 도로와 아파트만 즐비하게 늘어 서 있다. 이 도시는 러시아 최악의 공해도시로 평가되고 있을 정도다. 이 사고는 북극권 최악의 환경사고로 그 피해액만 무려 1천452억 루블(약 2조 4천억원)으로 평가되는데 이 피해 금액에는 토지정화, 하천과 해양 생태계 복구, 대기오염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금액은 단지 청구된 금액이고 여타 러시아의 기업들처럼 노르니켈이 실제로 지불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러시아 기업들은 환경훼손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언제나 회피해 왔다.

- 북극해와 같은 어름 바다에서의 유류 유출사고는 어름이 없는 바다에 비해 방제작업이 매우 어렵다. 첫째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 신속한 작업이 어렵다. 둘째로는 보통 바다의 유류사고는 기름띠가 수면에 떠있기 때문에 흡착포로 거두거나 유화제를 뿌려 중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어름 바다에서는 기름띠가 어름 밑에 흡착되어 어름을 따라 멀리 떠다닌다. 그러므로 흡착포나 유화제를 사용하는 방제작업에는 한계가 있다.

<그림 2: 풀 한포기 보이지 않는 노릴스크시>



출처:<https://www.google.com/url?sa=i&url=https%3A%2F%2Fitooit.tistory.com>

3) 북극권 주민들의 삶의 터전 상실

북극권에는 약 4 - 5백만 명의 주민들 러시아, 북미, 북유럽 등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다. 이누이트, 사미와 같은 원주민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의 생업은 어업이다. 물고기를 잡거나 물개 등을 사냥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로 인해 어름이 녹아 주민들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 어름이 녹으면서 그들 거주지까지 물이 차올라 해일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 사냥감의 개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전통적인 수렵 위주의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 먹이 사슬의 최종 포식자의 하나인 북극곰도 먹이감이 부족해 인간의 거주지로 유입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이누이트 여성의 모유에는 유해 환경 물질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축적되어 있다고 한다.
- 이 주민들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과도한 알코홀의 오/남용, 도박, 마약, 사이버 종교 등에 쉽게 빠져들고 있어 공동체가 파괴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었다.
- 북극권의 생태관광도 활성화되어 노르웨이의 Spitzbergen에는 1991년 관광객 수가 17,472명에서 1997년에는 45,100명으로 증가했다. 그린란드에는 1997년 3,300명에서 2000년 31,351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므로 생태관광이라고는 하지만 북극권은 이들이 바리는 폐기물과 관련 산업의 발달로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6. 북극권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북극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보다 자원개발로 발생하는 환경파괴이다.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의존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2020년 기준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세계 3위(12.1%), 매장량은 세계 6위(6.2%)로 유가(油價)가 러시아의 성장과 재정 수입을 좌우한다. 2020년 기준 원유, 휘발유, 천연가스 수출은 전체 수출의 49.7% 이상이며, 재정 수입의 31.9%, 그리고 GDP의 9.4%를 차지한다. 천연가스는 세계 최대 수출국이기도 하다. 광물 수출도 전체 수출의 1.9%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큰데 여기에는 석탄, 철광, 니켈, 다이아몬드, 금, 백금, 팔러듐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산업구조를 가진 러시아는 외화를 벌기 위해서도 천연자원의 보고인 북극권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이 북극권의 환경오염을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단위는 러시아의 경우 환경파괴 당사자인 국가와 기업이 유일하다. 환경CSO가 있지만 이들은 국제적인 단체인 WWF와 Greenpeace의 러시아 지부이다. 그리고 인근 국가를 포함한 북극권 국제 환경체제로는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가 대표적이다.

1)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 1996년 9월 19일 오타와 선언을 근간으로 창설된 국제 기구로 일종의 정부간 고위급 포럼의 성격을 띤다.
- 이 기구는 북극권 환경보호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 2013년 노르웨이 북부 Tromsø에 상시 사무국 설치하였다.
- 구성: 러시아 등 9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시참여단체로는 6개의 원주민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옵서버 국가는 한국을 비롯한 비북극권 13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옵서버로 참여하는 국제기구도 국제적십자연맹과 UNEP를 비롯한 13개 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옵서버로 참여하는 비정부기구로는 국제북극과학위원회와 WWF를 비롯한 13개 단체이다.
- 조직: 의장국과 각료회의, 고위관료회의와 6개의 실무회의(Working Group)는 상시 기구이며 필요에 따라 다양한 TFT가 운영된다.

- 6개의 실무회의: 북극모니터링 프로그램, 북극 동식물 보전, 비상사태 예비준비 대응, 북극 해양환경보호, 지속가능발전, 북극권 환경오염물질 조치 프로그램 등이 상시로 운영되고 있다.

2) 환경CSO: WWF와 Greenpeace

환경문제의 해결에 CSO의 역할에 대해서는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였다.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여론을 조성하여 정부와 기업에 문제해결을 촉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러시아 북극권의 환경오염은 그 심각성이 매년 증가하지만 환경 CSO의 역할은 모니터링 외에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러시아 정부가 매우 강하게 이 단체들을 억압하고 감시하기 때문이며, 심지어 모니터링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 WWF: 이 단체는 자연환경보호에 특화된 초국적 환경 CSO이다. 세계 100여 개국에 지부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UN을 비롯하여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초국적)기업들과도 활발한 협업을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운동성보다 생태계 보존 분야의 전문성에 특화된 국제CSO이다. 러시아의 경우에도 자연보호구역을 지정한다든지, 환경 사안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 그리고 생태관광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 Greenpeace: 운동성이 강조되는 국제 환경단체로 정부와 기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이 단체는 원자력발전소 반대, 멸종 위기 종 보호운동, 미세플라스틱 위험성 경고와 함께 친환경적인 대체제 생산 등 환경문제 전반에 관심을 갖고 국제적인 활동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러시아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러시아에서는 자연환경보호, 원전 반대, 전쟁과 환경문제, 종의 소멸, 기후 위기, 미세플라스틱 문제, 바이칼호 오염문제, 생태관광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으나 러시아 정부의 엄격한 감시와 제재로 실제적인 행동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

7. 맺는말

러시아는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쟁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는 전쟁 초기의 상황과는 정반대의 양상이다. 우크라이나가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 러시아에 금방이라도 점령 당하고 친러시아 괴뢰정권이 들어설 것만 같았지만, 석 달이 지난 현재 전선은 우크라이나의 일부인 남동부에만 형성되어 있고 남동부의 항구도시 마리우폴을 러시아가 겨우 점령한 정도이다. 그러나 침공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담하다. 수 만명의 병력을 잃고 고가의 탱크나 전투기와 같은 전투 장비도 파괴되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학교와 병원, 산업시설과 거주공간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파괴시켰으며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였다. 또한 천만여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고향을 등지고 난민으로 전락하여 이웃 나라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산업시설들과 건물들이 파괴되면서 엄청난 양의 유독가스와 중금속, 먼지 등이 배출되어 전방위적인 오염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그 후유증은 100여 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다고 한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에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하여 15개의 원자로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중 하나라도 파괴된다면 그

피해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다.¹¹⁾ 전쟁이 장기화 될수록 인명피해와 함께 환경오염은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확대될 것이며, 파리협약에서 합의한 허용치 섭씨 1.5도도 목표연도인 21세기 말이 아니라 몇십 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1972년 스톡홀름 UN회의 이후 반세기 동안 노력해 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고 인류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가 2015년에 체결된 파리협약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류의 노력은 단 한 사람의 독재자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한 사람의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 인류가 그의 제물이 된 것이다.

러시아 북극권의 환경오염은 푸틴의 일당 독재가 계속되는 한 결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를 지지하는 80%의 러시아인 역시 이 역사적인 범죄 행위의 공범이다. 현재 러시아는 독재국가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다. 통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의 종착역은 전쟁이고 이 전쟁에서 필연적으로 패하게 된다. 국가 전체가 이 독재자와 그 측근들에 의해 약탈 당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자원 부국인 러시아에서는 자원 수출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벌어들이지만 이는 모두 이들 개인 금고로 귀속되고 있다. 겉만 그럴듯한 무기들도 그 부품은 엉터리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전승절의 군사 퍼레이드 용으로는 그럴 듯 하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군인들도 이들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소수 올리가르히를 위해 전쟁에서 목숨걸고 싸울 의지가 있을리 만무하다.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북극권의 환경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 전쟁은 평화로운 합의나 협상에 의해 끝날 것 같지 않으며, 전쟁의 양상은 하나는 러시아의 일방적인 종전선언일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핵전쟁으로 비화할 것 같다. 핵전쟁은 승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환경문제는 이슈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종전선언의 경우 전쟁의 책임과 배상금 문제로 북극권 환경문제 또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 북극권 환경문제는 시민운동이 가장 발달해 있고 환경문제를 가장 민감한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캐나다 미국 등의 인접 국가나 ‘북극이사회’를 중심으로 조정되고 관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1) 한국일보 2022년 4월 26일자 인터넷판 참고.

<참고문헌>

- 강윤희, 2009, “소련 환경운동의 발전 과정 및 특징”, 『국제정치논총』 제 49집, 제15호, 한국국제정치학회
- 유진호, 2019, “지구온난화에 따른 국제해사기구 Polar Code 발효와 향후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 한종만, 2014, “러시아 북극권 지역에서의 자원/물류 전쟁: 현황과 이슈”, 『한국시베리아연구』 18권 1호, 배재대학교 한국 시베리아 센터
- 다니엘 예긴, 2021, 『뉴맵: 에너지, 기후, 지정학이 바꾸는 새로운 패권 지도』, 리더스북
- Lozan, J.,(hers), 2014, *Warnsignal Klima: Die Polarregionen* Uni. Hamburg
- <https://www.bpb.de/themen/europa/russland/48002/umweltprobleme-und-umweltpolitik/>
- <https://www.bpb.de/themen/europa/russland-analysen/2020/317724/kommentar-umweltaktivismus-in-russland/>
- <https://www.dw.com/de/russlands-allt%C3%A4gliche-umwelts%C3%BCnden/av-57711>
- https://www.kas.de/documents/252038/253252/7_dokument_dok_pdf_9285_1.pdf/cc33cd90-9bd7-6beb-4800-523626d2b28b?version=1.0&t=1539665119293
- <https://weather.com/de-DE/wissen/umwelt/news/2021-04-03-schockierende-umweltverschmutzung-in-russland-daten-aus-youtube>
- <https://www.boell.de/de/2020/01/13/von-kohle-schwarzem-schnee-und-umweltschutz-russland>
- <https://www.jstor.org/stable/44918195>
- www.google.com
- www.naver.com

야쿠트민족의 전통적 세계관과 주거문화¹⁾

김 자 영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1. 서론

지구상 가장 혹독한 기후조건을 가진 극북지역에도 인류의 역사는 그 흔적을 남겨왔다. 지난 수세기 동안 한티, 만시, 코미, 네네츠, 야쿠트와 같은 여러 민족들이 극한의 기후와 자연조건에 적응하며 시베리아와 북극을 포함한 북방 지역에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가꾸어왔다. 그 중에서 러시아의 사하공화국은 러시아의 여러 행정구역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겨울과 여름의 온도차가 75~90°C에 달하는 타이가, 툰드라 지대에 살고 있는 야쿠트인(Якуты)이 중심민족이다.

야쿠트인은 스스로를 ‘사하(Caxa)’라고 부르며 전통적으로 반유목생활을 해왔다. 이들은 튀르크계통의 민족으로 사하공화국 지역에서 오랫동안 여러 다양한 소수민족들과 함께 생활해 왔다. 17세기 러시아가 이 지역에 대한 지배를 시작하고 이후 소비에트 연방에 소속되어 러시아계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야쿠트인은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과 관습을 보존하면서 조상의 관습에 따라 생활하는 몇 안 되는 민족 중 하나이다. 문화의 여러 다양한 영역 중 의식주 문화는 특히 한 민족의 세계관과 정신문화를 반영하여 그들의 고유한 민족적 특성을 알 수 있게 한다. 전통적으로 반유목생활을 하는 야쿠트인은 유르타(Юрта)라고 통칭하는 이동식 집을 짓고 목축업을 위해 이동하는 삶을 산다. 유르타는 유목민족들에게 있어 ‘집’, ‘가족’ 등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화 영역인 주거문화 속에 녹아 있는 야쿠트인의 전통적인 세계관 속 ‘공간’ 개념의 조화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야쿠트인의 주거문화와 전통적 세계관 속 ‘공간’의 의미

주거는 모든 풍부한 민속적 정보와 관념들을 흡수한 문화의 핵심적 상징 중 하나이다. 야쿠트인에게 있어서 주거는 공간 속의 공간으로써 가족과 문화전통의 보고이자 동시에 자연계에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휴식을 주는 장소이며 ‘액막이’의 역할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공간이었다.

야쿠트인의 전통적 세계관 속에는 나-외부, 문화-자연, 인간-비인간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이

1) 이 글은 한국건축역사학회 2022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한 것임.

원적 대립이 존재한다. 이것은 자신의 것(내부, 집, 문화)-타자의 것(외부, 자연)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야쿠트인은 전통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자신만의 ‘공간’을 부여받는다고 생각했다. 이들의 세계관 속 인간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자라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 태어난 후 요람에 누여지고,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다 죽은 후 자신의 마지막 거처인 관에 누워 다른 세계로 보내진다. 전통적인 세계관에서 집은 인간의 생명력의 원천의 역할을 한다. 이 공간은 외부의 세계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일종의 보호막의 역할을 한다. 외부 세계와 나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 주거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사람은 자신의 집을 세계의 중심으로 간주했으며, 길을 떠나는 것은 항상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야쿠트인은 유목생활을 위한 이동 중 버려진 유르타에는 머물지 않았고, 오래된 재가 있던 자리에는 새로운 집을 짓지 않았다. 가장이나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의 주된 임무는 점을 통해 새 유르타를 지을 수 있는 적당한 곳을 찾아내는 일이기도 했다.

머물 수 있는 집이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만큼 사람은 정해진 규칙대로 ‘집’이라는 ‘공간’을 대해야만 했다. 집 안에서 눈이나 먼지를 터는 행위, 큰소리를 지르는 행위, 휘파람을 부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되었다.

결혼식과 장례식 역시 야쿠트인의 전통적인 ‘집’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 결혼식은 신부가 신랑의 새로운 공간 즉, 유르타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랑은 신부의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일종의 커튼(хаппахчы сабыыта)을 자신의 유르타 안에 설치하는데 이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역할로, 신부는 이 커튼 안에서 사흘 동안 머문 뒤 예복을 벗고 일상복으로 갈아입은 후 밖으로 나오면서 드디어 아내로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때 자작나무 껍질 커튼은 달의 위치인 유르타의 서쪽에 설치된다.

장례식에서 고인의 관은 유르타의 북서쪽에 배치된다. 이 위치에서 고인의 영혼이 인간의 세계를 통한 마지막 여행을 통해 ‘죽은 자의 세계’로 나아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죽음이 지나간 유르타는 악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태운 훈증을 통해 정화의식인 아르차를 시행함으로써 집-외부세계 사이의 균형을 잡는다.

유르타는 또한 ‘원’의 공간적 개념을 가지고 이 개념의 중심에는 난로가 있다. 유르타는 난로를 사이에 두고 왼쪽은 남성의 공간, 오른쪽은 여성의 공간으로 분리되곤 한다. 불은 야쿠트인에게 있어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중요한 삶의 상징이자 신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믿어졌다. 그래서 야쿠트인은 자신의 유르타 안의 난로에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했다.

3. 계절별 야쿠트 거주지의 특징

야쿠트인은 계절에 따라 겨울 집과 여름 집을 짓고 일정기간 정착한다. 이들의 겨울 집은 발라간(Балаган), 여름에 머무는 집은 우라사(Ураса)라고 부른다. 겨울 정착지인 발라간은 보통 1-3개의 유르타로 이루어지고, 우라사는 최대 10개까지의 유르타로 구성되는데 발라간보다 더 규모가 크며 방목이 편리한 목초지 근처에 지었다. 야쿠트인의 주거는 장원 안에 주거용 건물과 여러 채의 별채, 가축우리가 있는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라간(Балаган)

<그림 1: 발라간>



출처: <https://museumdruzba.ru/?p=3216>

야쿠트족의 고대 주거 유형 중 하나로 겨울을 나기 위한 주거 형태이다. 야쿠트인이 사는 사하 지역은 1년 중 7-8개월 동안 겨울이 지속되고 온도가 영하 60°C에 달할 때가 많기 때문에 난방과 단열은 매우 중요한 건축요소였다. 발라간은 일반적으로 사면이 잘린 형태의 피라미드와 유사한 모양으로 매우 완만하게 경사진 통나무 지붕을 얹고 통나무를 수직으로 세워 지붕을 받치고 있는 형태로 경사진 땅에 짓는다. 이는 건물이 열을 덜 뱉기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건물 한가운데에는 가장 중심이 되는 기둥을 설치하고 이것을 수평의 지지대로 다시 연결하여 고정한다. 이 위에 낮은 지붕을 만들고 지붕은 나무껍질과 잔디, 흙으로 덮었다. 집 내부의 바닥은 모래를 두껍게 깔아 눈과 추위로부터 단열효과를 내도록 한다. 이후 러시아 이주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 부유한 자들은 바닥에 판자를 까는 방식으로 변하기도 했다. 벽은 얇은 통나무나 장대를 엮어 만들어졌고, 외벽은 소똥을 섞은 점토를 발라 코팅되도록 했다. 코팅 작업은 최소 1년에 한번 주로 가을에 이루어진다. 외벽 주위에는 낮은 흙 제방이나 나무 울타리를 세워 자신의 장원을 요새화하기도 했다. 문은 반드시 동쪽으로 내고, 창문은 서쪽과 남쪽을 향하도록 한다.

내부의 중심은 난로이다. 불은 야쿠트인에게 생사를 결정짓는 생명의 상징으로 집의 북서쪽 모서리에 가까운 입구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벽을 따라서는 판자로 만들어진 침대가 배치되었고 커튼으로 서로 분리시켰다. 가장 귀한 자리는 집의 남서쪽이고, 난로가 위치한 쪽은 여성의 자리이다. 이외에도 원형이나 직사각형 모양의 나무테이블과 의자가 놓인다. 발라간의 북쪽으로는 소의 헛간인 호톤(хотон)이 세워진다. 호톤은 얇은 칸막이로 거실과 분리되곤 했다. 이렇게 주거

지와 바로 붙어있는 호톤은 약간의 난방 효과를 주기도 했지만 발라간 안의 공기를 더욱 오염시키는 역할을 하여 야쿠트인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원인이 되곤 하였다.

<그림 2: 발라간 내부 침대 배치>



출처: <https://museumdruzba.ru/?p=3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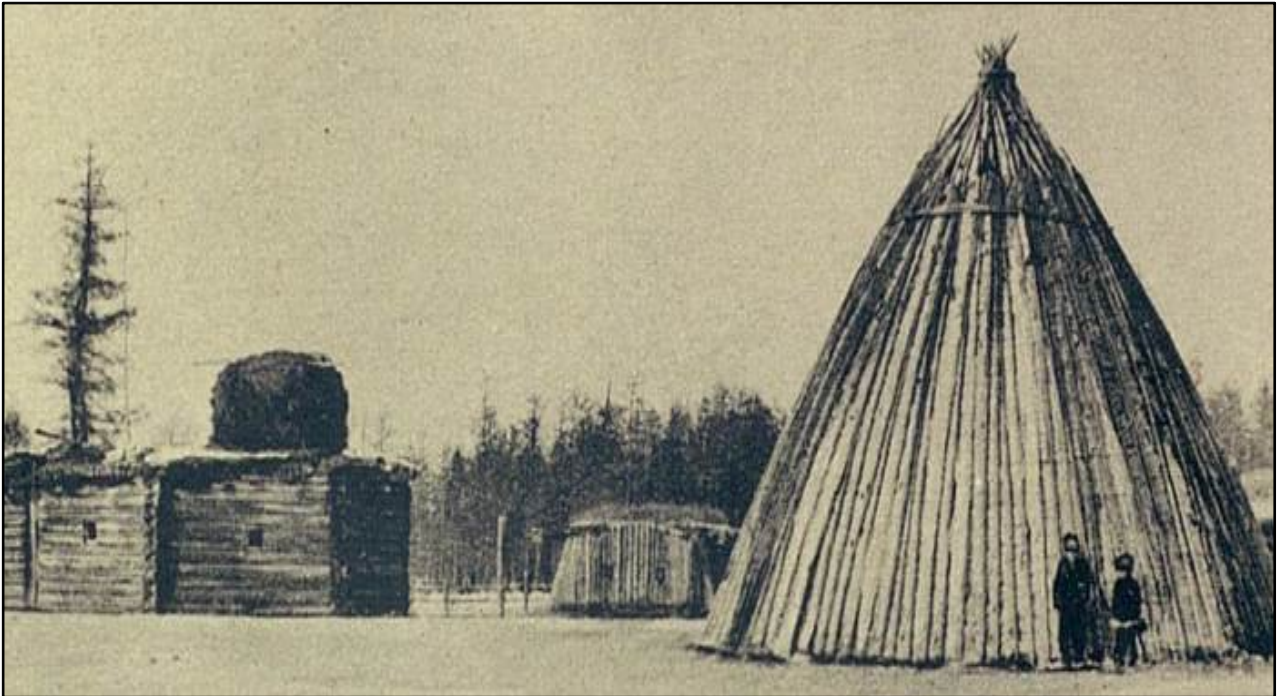
<그림 3: 발라간 내부 난로>



출처: <https://museumdruzba.ru/?p=3216>

우라사(Ураса)

<그림 4: 우라사 1>



출처:

<https://yandex.ru/images/search?from=tabbar&text=%D1%83%D1%80%D0%B0%D1%81%D0%B0%20%D1%8F%D0%BA%D1%83%D1%82%D1%81%D0%BA%D0%B0%D1%8F>)

19세기 이후 여름용 주거지는 발라간과 비슷한 방식으로 건설되었으며 건축물의 뼈대를 보다 가벼운 가죽으로 제작하는 것과 주거지 내에 호툰이 없다는 차이가 있었지만, 고대 야쿠트인의 전통적인 여름 주거지 우라사는 이와는 다른 형태였다.

우라사는 야쿠트인의 가장 오래된 여름용 주거형태로 알려져 있는데 야쿠트인은 5월부터 8월까지 우라사를 건축하고 이곳에서 여름을 지냈다. 우라사는 자작나무 껍질로 덮은 기둥으로 만든 원뿔형 건축물로 평균 직경은 10m, 높이는 11-12m에 이르는 상당히 큰 규모로 지어졌다. 건축 시스템은 비교적 간단하여, 수직으로 땅을 파고 둥글게 만든 방의 형태를 띠고 있다. 둥글게 만든 뼈대에 길고 비스듬히 만들어진 기둥을 얹는다. 높이 약 2m의 기둥 10-12개를 직경 5m 정도의 원형으로 깎아 기둥 상단의 역시 둥근 나무 프레임과 겹친 뒤 약 8m 길이의 기둥이 서로 기대어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건축되었다. 우라사의 외부는 자작나무 껍질 조각으로 덮고, 입구에는 자작나무 껍질을 물에 삶은 뒤 표면을 칼로 긁어내고 끈으로 꿰어 커튼처럼 만들어진 문을 달았다.

침대는 발라간과 마찬가지로 벽을 따라 배치되었고, 난로가 중심에 위치한다. 바닥은 흙으로 덮었다. 대륙성 기후의 영향으로 혹독한 겨울만큼 더운 여름을 지내야 하는 야쿠트인은 우라사를

덥고 있는 자작나무 껍질로 인해 항상 신선하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할 수 있다.

우라사의 종류는 모굴 우라사(Могол ураса)와 달라르 우라사(Даллар ураса)로 구분된다.

모굴 우라사: 손님용 주거로 규모가 크게 설계되었다.

달라르 우라사: 크기가 조금 작고 평균적인 집이라고 할 수 있다.

우라사는 발라간에 비해 보다 넓은 목초지 근처에 지어졌고, 호튼 대신에 티틱(ТИТИИК)이라 부르는 여름 헛간이 딸려있었다. 소와 말 등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헛간으로 겨울 집과 달리 사람의 주거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지었다. 곡물을 저장할 용도의 헛간, 육류를 신선하게 보관하고 얼음에서 먹을 수 있는 물을 구하기 위한 지하실 등 별채가 포함된 우라사 장원은 역시 나무 울타리를 세워 경계를 구분하고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도 하였다.

비록 계절에 따라 서로 다른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전통적 세계관과 관습에 따라 문을 내는 방향, 난로, 침대의 위치, 가족 중 남성과 여성 구성원의 자리, 우라사를 지을 땅을 선택하는 방법 등은 모두 발라간과 동일하다.

<그림 5: 우라사 2>



출처:

https://yandex.ru/search/?text=%D1%83%D1%80%D0%B0%D1%81%D0%B0+%D1%8F%D0%BA%D1%83%D1%82%D1%81%D0%BA%D0%B0%D1%8F+%D1%84%D0%BE%D1%82%D0%BE&lr=114234&src=suggest_T

4. 맺음말

야쿠트인은 혹독한 기후와 자연조건 속에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적응을 통해 오랜 세월 극북 지역에서 전통과 관습을 보존하며 살아왔다. 불을 숭배하고 집과 사람, 자연, 문화를 대립구도로 바라보는 세계관 속에서 야쿠트인에게 있어 공간 즉, 집은 삶의 중심이자 외부세계로부터의 액막이이며 피난처이다.

본고는 계절에 따라 이동하며 목축업을 하는 야쿠트인의 주거형태와 그 건축방식 속에 녹아 있는 이들의 전통적 세계관을 고찰함으로써 인류가 잊어버린 북방 민족의 고대의 삶의 형태 한 가지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1. Гоголев, А.И., *Истоки мифологии и традиционный календарь якутов*, Якутск, 2002
2. Данилова, Н.К., *Жилище в системе традиционного мировосприятия народа Саха*, Филология и человек, No. 3, 2008
3. Рыкова, В.В., *Сибирское зодчество: прошлое и настоящее.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обеспеченность темы*, Журнал Баландинские чтения, 2014
4. Толстова, С.П., *Народы мира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е очерки*, Изд.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1956
5. Электронный научный журнал, *Арктика и Север*, No. 12, Архангельск, 2013
6. <https://sakhaday.ru/news/mo-ol-uraha-v-tatte-autentichnoe-stroenie-lubok-ili-novodel> (검색일: 2022년 5월6일)
7. <https://www.yakutskhistory.net/%D1%8F%D0%BA%D1%83%D1%82%D1%8B/%D1%8F%D0%BA%D1%83%D1%82%D1%8B-%D1%81%D0%B0%D1%85%D0%B0/%D0%B6%D0%B8%D0%BB%D0%B8%D1%89%D0%B5-%D0%BE%D0%B4%D0%B5%D0%B6%D0%B4%D0%B0-%D0%B8-%D0%BF%D0%B8%D1%89%D0%B0-%D1%8F%D0%BA%D1%83%D1%82%D0%BE%D0%B2/> (검색일: 2022년 5월8일)

[공지 사항]

- 본 잡지 『북극연구』는 북극 지역에 관련된 인문, 사회, 과학 등 전 분야에 걸친 자유로운 형태의 글을 담고 있습니다. 게재되는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지급합니다. 여러분의 옥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북극연구』의 발간을 주관하는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과학연구소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연구영역의 확장과 연구성과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북극연구』의 발간 예정일이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고 마감일은 매 발간 월 20일까지임을 공지합니다.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에서 발행하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한국 시베리아 연구』의 출간 횟수와 일정에 변경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기존의 연 2회 발간에 서 연 4회(매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로 확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논문 투고 마감일은 매년 2월 20일, 5월 20일, 8월 20일, 11월 20일로 변경되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본 학술지의 질을 더욱 더 향상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